

제41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보고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상정된 안건

- 업무보고 1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10시03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기관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항이나 현안과제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전반기 기재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입니다.

이동운 기획조정관입니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입니다.

김지훈 감사관입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정재수 조사국장입니다.

이승수 복지세정관리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세청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세청 일반 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성실신고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두채움 서비스, 세금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편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등에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탐문, 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9000억 원 감소하였고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전년보다 5.3%p 감소한 41.4%입니다.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 속에서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둘째,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세행정을 경험하는 모든 국민과 납세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직원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내방 민원이나 각종 문의가 있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고 실시간 소득자료의 추가 활용방안도 모색하여 약자 복지 세정 역시 꼼꼼히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 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넷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동·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는 보다 쉽게,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납세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AI국세상담은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여 전화 응답률과 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빅데이터·AI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그 이상의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책임 세정으로 납세자 권리와 국민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과세논리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범정부 정책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더욱 폭넓게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반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직원들을 우수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직원들이 조기에 적응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위나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덜고 사기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전하면서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 개원과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차장입니다.

이종욱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영한 감사관입니다.

고석진 통관국장입니다.

한민 심사국장입니다.

한창령 조사국장입니다.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입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 추진 여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 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마약류 확산, 공급망 위기, 기술 유출과 같은 무역안보 위협 등 사회안전을 위협

하는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출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상존하여 국가 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K-관세행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저희 관세청은 2024년을 관세청 신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달성을 원년으로 삼고 사회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를 목표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0대 과제 중 55개의 과제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디지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쪽부터 핵심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글로벌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해외 현지에 마약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관 파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범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변은닉 마약 적발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항만에 배치하고 우범항공편 탑승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마약탐지견 양성,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확대하여 저희 청이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기관, 수사기관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 품목별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고 자체적인 유해 의심품목 분석 수행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여 소액면세를 악용한 분산반입과 수입요건 인증을 회피하는 불법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경 단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 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한 수출입위험 통합 DB를 구축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인적 교류를 통해 수입물품 정보분석, 검사 대상 선별 등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직구 가품 모니터링 등 민간전문가, 유관부처와의 협업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입수, 합동단속 등 국제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우범선별, 엑스레이 판독 정보 전송시스템, 자체 R&D를 통해 개발한 첨단기술 등을 업무현장에 접목하여 감시·단속 역량을 제고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술 교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물자,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확대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충격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구매대금 송금대행 조직, 환전소 등에 대한 불법외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기업 K-브랜드 경쟁력 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 단속을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 물품을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를 지속 혁신하고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보세 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금년 1월에 신설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 관리 개선, 국제무역선 이용 보세운송 특례 신설 등 보세제도의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고 주요 통관분쟁국과의 관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별 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기업일 경우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수출 당사자가 아닌 수출물품 제조자 등도 편리하게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국민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대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챗봇 서비스 도입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 통관 마이데이터 활용의 편의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촉진, 면세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외국인 면세품 대량구매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세관 반출확인 서비스를 지방공항까지 확대하고 휴대품 통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자 통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관세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을 K-관세행정 확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친환경 관세행정 그린 커스텀즈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원재료로 하여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던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관세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KOICA·IDB·ADB 등 국내외 기관과 연계한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조달청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입니다. 맞춤형 판로 지원과 조달규제 혁신으로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입니다.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조달의 원칙과 기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입니다. 공공조달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전자조달 플랫폼 나라장터를 개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업무 추진 과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보 차장입니다.

김웅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입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입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입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조달청은 민생경제, 역동경제 뒷받침과 공공조달의 기본 확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네 가지 핵심 키워드, 체감·현장·행동·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린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를 다음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전략,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입니다.

맞춤형 판로 지원과 기업 부담 완화로 경기 회복세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조달시장 진입부터 단계별 판로 확충을 돋는 탄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신설하여 약 670건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조달시장 첫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과 가까운 지방조직을 통해 조달기업과 해당 지역의 수요기관이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우리 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기업 문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청년·창업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에 나서겠습니다.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과징금 부과 체계도 합리화하는 등 규제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조달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고 전담 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첫 번째 꼼꼼하게 리스트업하고, 두 번째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시범 적용 후 확대 등 수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 번째 제안자에게 철저하게 피드백하는 등 현장의 소중한 작은 의견도 책임 있게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과 공공선박 조달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혁신적 조달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이 전방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 지원에 더하여 금융, 투자, 마케팅 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및 국민편의 관련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530억 원 규모의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혁신제품 제도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수출입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역량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과 도약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실증 사업 규모도 70억 원으로 확충하였으며 국제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한 혁신제품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입니다.

공정조달의 기본 원칙인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전반에서 입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삼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찰 평가 과정의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한편 공공주택 및 주요 대형 건설사업의 계약자 선정 심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책임 있는 심사와 평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감시, 선제조사, 조사·조치의 공공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도입 등 묻지마식 공급입찰 차단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LH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계약업무도 공정, 품질, 속도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8쪽입니다.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안전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원자재 비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27년까지 60일분으로 재고를 확대하고,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은 2024년에 최소 2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비축창고를 25년까지 신축하고 노후화된 창고는 현대화하여 정부 비축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이슈 발생 시 긴급품질대응반을 운영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안전관리물자는 확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안전 관련 위반에는 예외 없는 엄격한 평가와 제재를 통해 공공공사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전략,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입니다.

조달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까지 현행 나라장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전산 자원을 증설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002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테스트와 개통 준비를 통해 장애 없는 시스템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5개 자체조달시스템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공공조달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연 210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 종합계획의 수립, 조달특례의 성과 관리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조달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조달의 표준을 선도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장터를 키르기스스탄에 열 번째로 수출하고 아시아 최초 월드뱅크와 공동 포럼 개최, 5년 만에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를 주도하는 등 국제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달통계, 혁신지원, 소송대응 등의 역량도 확충하여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계청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를 확충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이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통계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기획조정관입니다.

이명호 통계정책국장입니다.

송영선 통계데이터허브국장입니다.

정구현 통계서비스정책관입니다.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입니다.

박진우 조사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여건과 체계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4년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통계청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생산·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정확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포함, 고용·연금·농가소득 통계를 개선·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삶의 질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관성 있는 범죄통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형 범죄분류를 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통계청은 디지털에 기반한 맞춤형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계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서비스를 확대, 통계시각화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간통계정보를 생활 밀착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를 늘리고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여 국가통계 활용도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통계청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통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신속한 경제동향 파악을 위해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해외 통계·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산업 특수분류를 상시 개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활동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기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 이동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이동통계를 연말에 공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데이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난제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도 확충하겠습니다.

센서스 100주년인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조사구 설정 등을 위해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공표한 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장래가구추계 작성 결과를 연내에 공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출생 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해 영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시도 인구추계를 발표한 데 이어 시군구 인구추계 작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작성, 분기별로 공표하겠습니다.

내외국인 인구추계, 이민자 기획보도 및 다문화가족 특성 조사 등 인구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 거버넌스 확충과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을 구축하여 지능형 통계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ODA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통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이슈에 대한 통계연구 및 대국민 통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순서표에 따라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자료 좀……

○위원장 송언석 자료 요구요?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1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정일영입니다.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세청 같은 경우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아주 평범한 자료인데도 5건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3페이지 마약·공급망 위기 극복 및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및 상세 자료, 9페이지 해외직구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관세청 계획, 상세 자료, 10페이지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텀즈 추진에 관한 자료 포함해 다섯 가지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무슨 배짱인지…… 업무보고에 근거해 평이한, 제가 다 지난주에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내놔요.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조달청에 모듈러 교사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요건, 기준, 심의 내용, 검토보고서도 요청했는데 주십시오.

국세청, 제가 유창이앤씨 그다음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관련되는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청장님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유창이앤씨, 송천이앤씨, 유창엠앤씨 같은 경우는 공공조달 입찰 담합,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특별세무조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창 관련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그거는 현황이고.

그다음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부과에 대한 조치 계획,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뭉개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세 기관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통계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계가 우리 정책의 뿌리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전문가께서 가 계시니까 통계행정 정말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활동을 하는 데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측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소비활동을 보면 의식주락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중에서 가장 뜻이 크고 중요한 지출이 뭘까요?

○통계청장 이형일 세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중에서 주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주거비를 제대로 반영, 산정해 내야만이 올바른 물가지수 관리가 될 겁니다.

물가지수 내 주거비 비중 한번, 비교표가 있네요. 국제 비교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각국의 물가지수 내 비중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31%, 영국 22% 정도, 다 20% 상회하는데 우리가 지금 10%네요. 우리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이용할 때 하는 임차료만을 매기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자가 주거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좀 생긴다고 보입니다.

이것 좀 불안한 거지요. 불안정한 거고 제대로 우리가 포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주거비라는 지표를 별도로 지금 작성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보조지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보조지표, 맞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를 충분하게 물가지수에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한번 물가지수 비중을 다시 보니까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주거비 한 20% 정도 비중이 되는 게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주거비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통계청장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자가주거비 대상이 굉장히 요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통 5년 단위로 저희가 소비자물가지수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의 체감도가 잘 느껴지는 주거비가 산정돼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제대로 된 물가지수가 여타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의 근거 지표가 되잖아요. 가장 큰 게 뭡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기본적으로는 경제정책하고 통화신용정책에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제일의 근거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비자물가지수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지요, 현재.

그렇게 됩니다.

좀 넘겨 주시지요, 다음.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제일의 지표가 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신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지요.

지금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의 동향이 가장 관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17주간 연속 상승하고 있고 6월 한 달 주택가격이 0.38%가 올랐어요. 이게 31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 폭을 기록했거든요. 전셋값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61주 연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택가격 지표들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주거비를 포함한 CPI는 어떻게 되느냐. 4월 달부터 있잖아요 2%대로 지금 떨어졌지요. 2.9%, 2.7%, 6월 달 2.4%,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2%대로 안정화됐다,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의 주요한 인사들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라고 일종의 대세론을 펼치고 또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CPI, 특히 주거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CPI가 제대로 된 신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한 괴리가 있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자가주거비 문제가 좀……

○안도걸 위원 그거는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결국에는 CPI, 물가지수를 산정하면서 주거비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잖아요. 결국 자가주거비를 결정하는 게 주택 매매가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으로 빠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작성·관리에 있어서 좀 한계점들이, 또 이러한 정확한 물가지수의 신호 기능을 좀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주거비를 제대로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개편을 굉장히 서둘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CPI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신호 기능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작업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달비 관련입니다.

화면 넘겨 주시지요.

지금 소비 패턴 그리고 유통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신속 배달하는 유통 패턴이 표준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굉장히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지금 외식비에 있어서 배달비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네요.

배달의민족에서 8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배달해 먹으면 배달료가 8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기요에서 7000원짜리 설렁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달했다라고 하면 이게 5000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식 배달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또 그게 물가지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지수 개편 때 이걸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통계청장 이형일 외식 배달비는 현재 지금 실험적 통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25년 기준을 개편할 때 배달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더 논의한 다음에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서울 강남구을 박수민 위원입니다.

조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도서부터 시작된 혁신조달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최근 추진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현재 지금 2015년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보자라는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혁신조달의 방향이 맞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절차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조달 파트에 있어서 제일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제도 자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조달청도 업무를 발전시켜 온 이력이 깊고 해서 투명성 그다음에 경쟁을 통한 저가입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구매력으로 어떻게 기업 생태계의 성장사다리를 여느냐 하는 시대적인 새로운 미션에 조달청이 도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2015년 이후니까 거의 10년 다 됐습니다. 아마 충분한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추가적인 발전 계획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이제는 저가입찰이 아니라 혁신조달이다 그런 부분을 각오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한번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예.

○박수민 위원 한 번 더 강조드릴 점은, 혁신조달을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성공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권장한다, 이런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정책적 의지 속에서 스스로의 혁신 웰러티를 검증받을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적자생존의 취사선택까지 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시범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수요기관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적자생존까지 다 가능한 것이고.

조달청이 그동안 발전시켜 온 업무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계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AI 그리고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통계입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통계청이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한번 공유드리고요.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통계청의 업무는 어떻게 변할지 일단 통계청장님의 기본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도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활용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저희가 산업분류를 함에 있어서 AI를 저희 안에서 직접 가동을 하면서 자동분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자료와 같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실제 조사에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방문조사 방식입니까, 전화 방식입니까, 병행하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인구 센서스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서 표본조사 20%로 저희가 2015년부터 줄였습니다. 그 나머지 75%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25%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주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려면 먼저 가서 상의를 드리고 응답자가 모바일로 하겠다 하면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계청장 이형일 20%입니다.

○박수민 위원 20%는 방문조사 혹은 전화 면접 이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박수민 위원 그러한 부분도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시대에 선제적으로 확보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더 실시간의 통계 인프라를 쌓을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의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하시면서 대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한국은행과 국세청 데이터와의 교류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계 작성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요 국세청과도 협의를 해서 필요한 표본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박수민 위원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IT·과학 행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업무를 개시하시는 시점에서 보실 때, IT·과학 세정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추가 보강할 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국세청장 강민수** AI, 빅데이터 관련해서 크게 두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고 하나는 공정과세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상담이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신고자료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특히 조사 대상 선정하는 것, 정기든 비정기든 이런 부분에서 성실도 분석을 어느 정도 대체해서 좀 신뢰성 있고 그다음에 투명성 있는 쪽으로 조사 선정하는 것이 지금 AI, 빅데이터 관련해서 일단 큰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청장님께서도 실수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가 연말정산 인프라가 잘돼 있다 보니까 개선이 늦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서비스를 시도한 것인데 이제는 납세자들이 클릭하지 않아도 어떤 세금을 내야 될지 선제적으로 취합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주십시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대한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해서 본 기재위에 보고도 해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심 세무조사 시작하셨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개별 과세정보기는 한데 일단 매출액이 2000억이 넘어가면 5년마다 이렇게 순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단골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오전 질의는 관세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시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계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청장님, 알리 통관 절차를 좀 없애 달라라고 중국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오기형 위원** 현행법상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해 통관 절차를 없애거나 아니면 트럭째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관세청장 고광효**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알리 통관 절차,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고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허용할 계획이 있는가요?

○관세청장 고광효 전혀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늘 관세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속에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마약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행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148kg 그다음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게 601kg, 그러니까 한 70~80%가 해외직구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후에도 혹시 논의가 있으면 즉시 국회에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알리 저가공세에 대해서, 관세청 산하 어떤 창고에서 화물보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들어오면 보세구역에서 처리하기 전까지 지정장치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절차가 끝나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의 일시보관 장소가 지정장치장인데 이 지정장치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화물관리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는데 맞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오기형 위원 평택세관에 대해서, 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지정장치장 규정을 바꿔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취지의 보도 보셨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오기형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때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관세무역개발원이라고 해서 관세청 유관단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9년도 10월에는 기준 자체가 150g 미만 초경량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수가 되면 인하한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서 30kg, 월 10만 건, 50kg 초과 화물에 대해서도 1kg당 보관료 얼마 할인 죽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 특정 업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더라, 그게 알리에 관련된 물품을 통관하는, 대행해 주는 업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 알리 저가공세에 대해서 관세청 산하 창고에서 더 적극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정장치, 그러니까 관세무역개발원이 임의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 중인데 개발원이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이 창고 공간, 보세구역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단순하게 모든 업체에게 주는,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제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라이선스를 줘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거래조건에 대해서 관세청이 서로 협의하고 사전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면이 세관장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중에 있고요.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인상, 이 관리비를 인상할 때는 승

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할 때는 그런 요건이 없다고 하면서 임의로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단순한 영업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도 사회적 물의를 빚는다면 이 감사원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교체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세청장 고광효**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가 24년 5월 말 현재 60개 특송업체가 감면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업체가 감면액의 한 3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실제 지금까지의 현황과 그다음에 이른바 운영실태상 지적된 문제점들을 별도로 해서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통계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계부채 이슈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내수경제가 위축되는 것도 가계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것인가가 계속 저는 화두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접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청과 관련해서 뭔가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2023년 12월 말 기준, 작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가 총량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평균 부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 기준 해서?

○**통계청장 이형일**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게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 등등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발표된 게 작년 3월 통계가 최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은 없습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예, 1년에 한 번씩……

○**오기형 위원** 없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해서 가구 평균 DSR도 자료 제공할 수 없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이것은 금융 당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것을 금융 당국…… 금융위가 하느냐, 한국은행이 하느냐 이것 논쟁도 막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도 뭔가 자료 갖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50인 미만 임금근로자 평균 부채 이것도 자료가 없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임금근로자 부채는 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기상 그 시점까지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올해 3월에 발표된 게 2022년 12월 통계가 최신입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구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 가금복 안에 이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직접 제공하십시오. 다음에 또 자료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윤호중 위원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직 취임식을 하시기 전이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은 사안들을 짚었기 때문에 청장님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일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처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청장님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외부로부터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도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또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결과를 보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우집 사장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성남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부청 관할이라 인사청문회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단골집이었다고 그립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이분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까 성남시로부터 불법 운영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불법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규정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과 맞지 않게 포상 결정을 하면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자기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외부 검증이나 공개검증을 웬만큼 잘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검증 부분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도 보다 더 엄정하게 정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윤호중 위원**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윤호중 위원** 요즘 굉장히 핫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지난주에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임성근 사단장,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요 종사자인 이종호 씨가 경무관 조 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시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윤호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세청이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하는 데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 모 경무관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한, 이종호 씨가 자랑한 일이, 녹취록이 거론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인천세관 직원 두 명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런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범죄행위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청 내에서 징계 조치나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한 명에 대해서만 직위해제를 하고 관련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인사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 이런 것입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윤호중 위원** 이게 경찰의 수사도 그렇고 관세청의 조치도 그렇고 지금 1년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혐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은 경찰에서도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뭔가 힘 있는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관세청이 제대로 인사 조치를 안 하는 것도 윗선 눈치 보기 아닙니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관세청장 고광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호중 위원** 혹시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아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전혀 모릅니다.

○**윤호중 위원** 전혀 모릅니까?

조 경무관 이분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감춰 달라, 그러니까 보도자료에서 빼 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과정에 관세청장에게 보고도 없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관세청 직원들의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인천공항세관장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중 위원**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마약 밀수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마약범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 이외에 과거에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직원들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사례와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가 알기로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우리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고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첫 번째 사례를 놓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언석**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이어서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에 외압 행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년간 시간을 끈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관세청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1년씩 끌고 언론에서 수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자꾸 나가다 보면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여기 보면 검사 직원들 근무 구역이, 계속 있다 보면 이런 일들에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검사 직원들의 근무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지금?

○**관세청장 고광효** 지금은 랜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후 약 처방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이런 랜덤 배정이라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약 밀수라는 것은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도록,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어디에서 래그가 걸려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한 분은 조치를 받았고 여섯 분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아무래도 결과가 없는데 청장님 마음대로 인사 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마약 단속하는 전체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확실해진 후에 정계 조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관세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늘어난 업무 중의 하나가, 온라인 직구가 지금 6조 6000억 정도, 53%가 증가되면서 1위가 알리고 2위가 테무로 이렇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좋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해외직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또 좀 걱정이, 중소상공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청장님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언론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짹통 문제 또 이외에 중금속이나 발암 문제, 특히나 화장품이나 어린이 제품의 피해가 많다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38종이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더 급증해서 134건까지나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중에, 특히나 중국 업체가 많다 보니 평택세관이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천세관이나 다른 세관에 비해서 2~3배가 많던데 맞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아졌던데,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당 검사원 한 분이 약 1600건을 조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있다 보니…… 또 마약 전담 조사팀을 꾸려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그것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약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601kg이나 늘어서 17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데 사기도 떨어질 거고 업무 배정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잘 배분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리고 강민수 청장님 나오셨네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이인선 위원 내일이 취임식인데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은 내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국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이인선 위원 불성실 납세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강제징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27년 정도, 24년 전의 세율하고…… 세율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때 24년 전

같으면 상속액 10억 정도에 40%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는 10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으로 보면 4채를 살 수 있었는데 2024년 현재는 아파트 1채가 13억이 되면서 결국은 13억에 대해서, 4채가 아니고 1채인데 40%의 상속세를 낸다는 게 굉장히 폭탄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오면서 상속을 할 텐데 그 상속이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고, 상속하고 나면 배우자한테 했다, 배우자가 또 갑자기 사망하면 자식들한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배우자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성가족위원장이라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셔서 상속세를 물가하고 연동을 하거나 과표를 표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연동화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다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인데 저희가 집행기관 입장에서 세제 개편, 특히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여건이 변화해서 한번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도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세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국세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 국민들께 신뢰받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일반적으로 재판 내용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나오면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되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임광현 위원**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재판기록도 수집하고 합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최태원, 노소영 씨 재판 판결문을 보면, 노태우 씨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에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

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노태우가 김석원에게 200억 원을 맡기고 받은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청장님, 이 건이 중여라면 91년에서 92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 때문에, 즉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과세가 어려울 수 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부과제척기간을 충분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과세가 어려울 겁니다.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91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서 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300억 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말씀하신 그 차용증 내지는 약속어음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 저희도 보도된 내용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임광현 위원**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에 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중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여라면 최종 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 있는 기업가가 탈세자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후손과 회사가 인정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 재판기록에서 보듯이 노 전 대통령 쪽에서 그 당시 선경에 300억 원 주고 받은 증빙들, 즉 약속어음 4장과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이렇게 오랜 시간 왜 보관했겠나, ‘이것은 우리 재산이다. 나중에 딴소리할지 모르니 증거로 가지고 있자’라는 의도로 보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제가 특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행히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되겠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세청에서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이게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국세청에서 법원에 최태원·노소영 간의 재판기록이나 제출된 증거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그 부분 했는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법원 협조를 받아서 재판기록이나 제출된 증거들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세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워낙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증빙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면 위 재판 근거들로라도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재벌그룹 사주 일가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 몇 국에서 하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비정기 같은 경우는 4국에서 하기도 하는데 또 1국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 건은 아마 서울청 4국에서 하는 게 업무 분장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서울청 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령 검토나 또 특히 시효 검토 이런 여러 부분을 저희가 해 보고 과세해야 될 건이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 그래서 국가에 추징되었어야 할 자금, 그러나 추징되지 못한 자금, 이 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임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실력 발휘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실력 발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조 모 경무관과 또 인천세관과의 관계 간에 간략하게 보충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관세청 직원들이 여기 직접이나 또 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은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1년 동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경찰 수사에서, 경찰에서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을 했지만 그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검찰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각됐단 말이에요. 대개 그것 보면 어떻든 기본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이 마약범들과 공모하거나 방조해 가지고 범죄에 이른 혐의는 현재까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개연성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된 것 같은데……

이것 처리하는 관세청이나 인천청의 태도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일단 청장이 직접 그 해당 경찰서에 전화한 적은 없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면 인천세관장이 통화한 겁니까, 그게?

○관세청장 고광효 인천세관장이 해당 경찰서에 통화했는지는…… 경무관이 통화를 한 걸로 제가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무관한테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관세청에서. 인천세관장이든 세관장 아니면 다른 부하 직원이든, 조 모 경무관이 공항경찰단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런 인연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연락했겠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누가 연락한 거예요, 그게?

○관세청장 고광효 경무관한테 누가 연락을 했냐고요?

○정성호 위원 예.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아마 인천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알고 있어서 공적으로 세관장이 그분께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 기관장 모임이 공적 모임입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게……

○정성호 위원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관세청장 고광효 아닐 겁니다.

○정성호 위원 제 지역구도 기관장들, 국회의원, 시장, 경찰서장, 전방이니까 부대 사단장 다 모여서 밥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기관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친목 모임이지요, 사실은.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항경찰단하고 인천 공항세관장은 모두 다 공항을 관장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인 두…… 인천세관장하고 공항경찰단하고 공적으로 같이 만나고 업무 협조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기 지금 국회에 보고자료 내면서 ‘인천공항세관장이 인천 지역 기관장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관계로’ 이렇게 써 놓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장 모임은, 청장도 다른 데에 근무해 봐서 알겠지만 각 지역마다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다 기관장 모임이 있어요. 이건 공적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갖다가 이 국회 보고에 써 놔서 제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관 차원에서 공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답변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공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인천세관의 직원들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내부 감찰을 하든지 감사를 해 가지고서 실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런데 저희가 감찰을 해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기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정성호 위원** 그리고 내부 점검 결과, 내부 감사 결과, 확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이 기관장 모임의, 인천 지역 기관장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관계로…… 기관 차원에서 말이야, 지금 현직도 아니야, 다른 데로 떠났어. 거기다가 전화해 가지고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피차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 모 경무관도 사실은 선의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사실은 다른 분들도 이런 관계, 어떻든 이런 개인적 인연을 통해 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부탁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받아요. 청장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런 선의에서 했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게, 관세청장이니까 청장부터 생각을 바꿔야지, 이것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지. 그 선결 조건이 먼저 내부를 좀 알아보고 나서, 내부에서 문제를 점검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천세관을 통해 가지고, 통관 절차에 과실이 있었든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관세청장 고광효** 그때 아마 인천공항세관장이 알아본 것은, 알아봐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협의가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은……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인천세관이 관련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면 또 기관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있고 아까 얘기한 사기도 저하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부적절한 거잖아요. 청장이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그게 잘못하면 청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는 인천세관이나 관세청의 대응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청장이셨어요? 이것 보고받았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서 마약사범들이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적발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됐는데, 인천공항 세관원들이 이것 봄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또 수사를 했겠지요,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구체적인 혐의는 나오지를 않았어. 그렇다고 하면 내부 점검을 해 가지고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문제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건 보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경찰에 공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적 루트를 통해서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청장이 아직까지도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내부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저희는 아무리 저희가 점검을 했더라도 직원들이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이게 사적 인연을 통해 가지고 부탁해서 알아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현재 공항경찰단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찰의 언론 담당하는 기획조정관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보는 그런 과정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지적하고 질타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론보도 관련 이 보고를 보니까 좀 한심하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장은 계속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잘 점검해 보고 그야말로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이종욱 위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차례 유예됐다가 정부에서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님도 유예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부자감세라든지 주식시장의 큰손 이탈에 따른 일반 투자자 피해 문제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 저는 오늘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생각 못 했지만 최근에 부각되는 중산층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지난번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잣은 실수에 대해서 얘기 나눴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인적공제가 제외되면 그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보험료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이런 특별공제도 함께 제외되는 거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런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한 문제가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중산층과 고소득자 구분 기준 하는 월 530만 원 실수령하는 근로자를 가정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을 전액 카드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식투자에 15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주식거래로 105만 원 수익을 내면 물론 금투세는 안 듭니다, 5000만 원 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5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돼서 인적공제가 제외되고 그에 따라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는 것처럼 환급액을 추계해 봤더니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 기준으로 하면 142만 원을 환급받는 데 비해서 금투세가 시행돼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면 환급액이 35만 원으로, 107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 가정이 전제된 계산입니다만 청장님, 금투세가 일단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만 앞으로 금투세 도입 논의를 할 경우에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특히 인적공제 관련 부분은 일단 세제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저희는 어떤 우려스러운 의견을 전달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인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발 해외직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직구는 이제 국민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중국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정부도 지난 5월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큰 대책 중에 KC인증 의무화 문제는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그런 비판으로 적용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집중 점검하는 방법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이 화면은 인천세관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해물품을 점검했는데요. 그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악성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50배, 70배

초과한 사례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카드뮴, 납 등 중금속도 수천 배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장님, 이런 제품들이 재수입되면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막아 낼 수 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아무리 유해성이 확인된 물품이라도 품목이나 공급자 등을 위장해서 재수입한다면 모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물품명을 다르게 한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 통관에서 잡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검사하고 있는지 검사율이나 적발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가 해외직구 품목은 100%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병성이 있는 물품을 선별해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 방법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세법 254조, 작년에 새로이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전자상거래의 특별통관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 상거래업체한테 수입물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안인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 관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규정은 해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도록 기재부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만큼 이 254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이종욱 위원 다음은 직구 관련해서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타격이라든지 유통업체 봉괴 위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중소기업분들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가 단속되지 않으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하고 계신데 직구 관련 불법행위는 어떤 내용이고 관세청에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고광효 기업형 생산자가 상용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서 밀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직구 관련 불법행위고요.

저희들은 그런 불법 수입·유통물품에 대해서 모니터링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법 직구물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또 기업형 판매조직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건 분석으로 불법 해외직구 범죄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국세청, 관세청장님, 조달청장님, 세 청장님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 4조, 4조의2 등에 따라서 했으니까요 자료를 점심 끝나고 오후 질의 시작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국세청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국세청장 강민수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서울청장님에서 이제 본청장으로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가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청장님이 조직을 이끄는, 국세청이라는 큰 중요한 조직을 이끄실 그런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걸 다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 국민들이 청장님께 뭘 가장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짧게……

○국세청장 강민수 일단 저희 국세청이 가장 중요한 게 재원 조달하고 공평과세니까 일단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겠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 살리는 데 여러 보탬이 되셔야 되겠고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정 뭐 여러 가지, 또 따뜻한 국세행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 이어서 하고 또 나중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할 겁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체납세액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청장님 청문회 때 답변도 좀 다르게 하셨고 또 자료 요구를 해서 국세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려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선 첫째 보면, 그때 청장님께서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조세불복이나 이런 게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 빼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보이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경정청구·불복환급액도 지난 5년간, 서울청이 아닌 국세청 본청에서 한 토텔을 보면 경정청구가 2022년 대비 작년에 50.7%가 늘었고 불복환급도 무려 74%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게 금액으로 쳐도 무려 27조 원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렇지요? 이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 정도면 엄청 늘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인정하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동일 쟁점, 서울청의…… 지난번 청장님 말씀에 종부세 그런 걸 빼고도 이렇게 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목별, 소득세든 법인세든 어느 세목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그걸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통계도 없고 아주 불성실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장님은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자료 더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무리한 그런 세금 거두는 거 하면 안 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체납세액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세수 부족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정부에서 한국은행한테 빌려 쓴 돈도 꽤 많고…… 일단 정리중체납액 그리고 정리보류체납액 등 보면 정리보류체납액이 88조, 정리중체납액이 18조, 이거 엄청나게 큰 액수 아닙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세금을 걷기보다는 체납한 것을 제대로 걷으면 좋잖아요.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세무행정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보류가 일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데 일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들어났다고 생각해요?

○국세청장 강민수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정리보류라는 것은 막 적극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제쳐 둔다는 의미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 나중에 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추적조사, 탐문 이걸 활용해서 더 징수를 정확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부실해요. 수납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체납 징수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말씀만 하시는 건지, 하려면 구체적인

분석 내용, 계획, 조직,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요? 있는데 안 주시는 건가요?

○**국세청장 강민수** 아닙니다. 수납유형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데 체납규모라든지 다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중에 저희가 통계로 뽑을 수 있는 내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나중에 국정감사 때나 그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얘기할게요.

조달청장님, 혁신시제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혁신시제품 제도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실 건가 보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돼야 될 거고.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현재 지금 사후관리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청장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듈러 제품 문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지난 번에 국세청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됐는데 이 내용 아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프리패스 얘기가 나오면서 신청한 지 이틀에서 5일 만에 승인이 됐다.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줘요. 없대요. 그러면 이 의혹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말하자면 굉장히 독과점 상태에서 많이 선정이 됐고, 선정이 돼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부실하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시제품으로 선정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품질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달청장 임기근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건하고 관련해서도 혁신시 제품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의혹이 없으면 해명을 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조달청장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장께서는 공수처에 고발이 됐어요. 고발인이 누구입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해당 수사 담당 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영등포경찰서 경정인가요, 수사팀장?

○관세청장 고광효 예, 수사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청장 외에도 같이 고발된 분들이 있던데 혹시 누구누구 고발됐는지 아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신문 기사에서 듣기로는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님도 고발되셨고요 경무관도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인천세관장은 고발 안 됐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 뒤에 '등'이라고 나와 있어서.

○진성준 위원 고발장을 아직 입수해서 보시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왜 입수해 보지 않으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아직 저희한테 무슨 통보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언제 고발됐는데요?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서 알기로는 지난주 초반에 고발장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도 근거 없이 고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무슨 내용으로 고발당했는지는 방어 차원에서라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를바 고발인이 주장하는 청장의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군요?

○관세청장 고광효 변호사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변호사법 위반이고 어째서 직권남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추정만으로밖에 알지 못하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정을 하고……

○진성준 위원 그것만 알고 계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문제의 조병노 경무관이 지난해 10월 5일과 10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문제의 영등포경찰서 경정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10월 5일 첫 번째 통화에서, 이때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주일 전인데, 그리고 10월 10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발표 전입니다. 5일 전입니다. 전화를 하면서 ‘관세청이 수사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인천세관장이 아마 관세청장과 여러 번 통화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녹취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립니다. 물론 조 경무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조 경무관은 ‘인천세관장이 관세청장과 여러 번 통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세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인천세관장은 저희 지역 기관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도 받고 통화도 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겠지요.

문제는 이 마야 필수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느냐 또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그 문제를 두고 통화를 하셨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후적으로 모 경무관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을 제가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진성준 위원 나중에?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10월 10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0월 10일 이후에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관세청장 고광효 아닙니다. 그 전에 빠지는 것 같다 정도……

○진성준 위원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어떻게 빠지게 됐냐고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국감 전이기 때문에, 국감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나면 저희가 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드릴 말씀……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인천세관장은 억울하다, 관세청 직원들이 개입돼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뭣도 없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막으려고 애를 썼다는 취지로 보고를 한 거군요, 그래서 결국 빠지게 됐다라고.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단순히 사실만, 관세청 직원이 보도자료에 빠졌다, 빠지는 것 같다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10월 14일 두 번째 통화에서도 그 경무관이 영등포 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보도 관련 부분에서 관세청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요, 그 경무관이 담당 경정과 통화를 할 때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신경을 썼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직원들의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경찰에 전달해서 보도자료에서 빼거나 수사 결과 발표에서 빼도록 노력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세청장 고광효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고요. 사후적으로 신문지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병노 서장, 지금은 서장이 됐지요, 경무관하고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세청장 고광효 그 당시에는 조병노 경무관이라는 이름조차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진성준 위원 모르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로 같은 동문이에요. 후배더라고요, 조병노 경무관이.

○관세청장 고광효 예,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성준 위원 나중에 알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첨보보고서가 이미 세관 내에서 작성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작년 초반 일이기 때문에, 작년 1월 달인가 2월 달 그 사건은……

○진성준 위원 언론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12명이 마약을 들여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범죄 첨보보고서가 세관 내에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건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런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더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대구 동구갑 최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세청장님, 내일 취임식인데 미리 앞서서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 저번에 우리 청문회 할 때 제가 성남의뜰 관련돼서 탈세 제보 관련 건 한번 말씀드렸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 사후조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로 추후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알려 주십시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정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혹시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올해, 여러 가지 세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같고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도 상당히 어렵지만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 앞으로 국세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민생침해 탈세라든지 역외 탈세 그리고 지능적 재산 은닉 관련된 것 또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고도화하는 것 또 디지털기술 이상의 과학세정 정착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청장님 재임 기간뿐만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결국 국세청에 우수 인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외부와의 협업 같은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자료화면 하나 좀 보시면, 워낙 이것 문제점은 다들 잘 인식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일단 합격점만 내놨습니다만 실은 국세직에 대한 응시자도 감소하고 있고 또 국세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자 숫자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유독 세무직이, 물론 점수가 전체 인재들의 우수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합격 점수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은석 위원 우리 국세행정이 결국 국가재정의 정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외부 환경도 어려워지고 또 외부의 탈세와 관련된 것들은 되게 지능적으로 바뀌고 또 AI나 빅데이터 관련돼서 국세 업무를 되게 고도화해야 되는데, 좋은 인재들이 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봐서 국세청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저희 국세청 직원이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많은데 국세청을 이끌어 가는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희 일선에 있는 직원이 의욕이나 실력이 약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 주신 직렬별 합격점이 지금 저희 국세청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승진 적체나 업무량 부담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블라인드 같은 그런 외부 웹에도 보면 저희 청에 대한 어떤 자책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말한 승진 적체 부분도 외부기관하고 어떻게든 풀어 나가고 민원 부담도, 직원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저희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단단하고 또 퇴사도 좀 적고 해서 잘 끌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의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최은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청장님 재임 시에 좀 더 장기적인, 국세행정의 선진화나 국세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국세청에 지원하도록 만들고 또 그런 인력들이 본인들의 전문성도 기르면서 본인들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국세인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인재를 확충하고 인재들에 대해서 육성을 어떻게 하고 또 비전을 부여해서 장기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법령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세인력에 대해서 수준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모이고 또 이렇게 리텐션(retention)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 같은 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세청장 강민수** 하여튼 저희 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 과정에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 관세청장님,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최은석 위원** 올 초에 관세청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외환사법의 88%가 가상자산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통계는 맞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최은석 위원** 또 최근에는 보면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하기 위한

자금 반출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 결제하면서 수출입 가격도 조작하고 여러 가지 조작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미신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내역 정보를 더 달라고 관세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그 얘기 좀 들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관세청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외국 거래소로 보내지거나 외국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지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데 맞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상자산 관련된 외환 관련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 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하여튼 저희 관세청이 밀수나 부정무역을 위해서 가상자산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입수를 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앞으로 4개 청에 대해서 제가 주되게 관심 가지고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질문 시간에 우선 통계청장께 우리나라 통계자료 중에 자랑할 만한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불평등을 해소할 그리고 우리 국민을 돌보고 살리는 통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니 기재부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임기를 좀 장기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조금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지요.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했는데요. 저기 근본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절실한 일이 무엇인가. 다들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

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얘기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등의 대물림이거든요. 이 문제 지금 끊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부처는 이 관점에서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땀과 노동으로, 노력소득을 얻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땅과 주식,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하지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금투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간디도 얘기했습니다, 노동 없는 부가 얼마나 그 사회를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점 없고 원칙 없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음 페이지요.

결국 개인은, 운은 다 불평등하지요.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 태어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이걸 개인에게 불행으로 맡겨 놓는 것, 사적인 영역으로 맡겨 놓는 것이 전형적인 후진국이지요. 과거 봉건제도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해결할…… 정의가 아니다, 부정의로 바꾸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영역이 늘어날수록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은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4개 외청에서도 이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이 뭘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공화(共和),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1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인간으로서의 존엄·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우리 국가는 이 조항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의 대물림보다는 가난의 대물림에 관심을 갖는 게 공적인 책무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가침이에요, 기본적 인권.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 추구, 자유와 평등 등을 보장하라고 국가를 만들고 그걸 헌법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잘하려고 개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집행하는데 우리는 2번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위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상위 1%, 10% 또 중산층이라는 일부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을 각각 청에 맞춰서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가장 낫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일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 관련해서 늘 말씀 나오는 게, 존엄주의란 말씀 들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존엄주의. 능력주의가 아니고 존엄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상위 가치로 두는 지향을 말하지요.

존엄의 평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평등이거든요. 같은 것은 같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같게 취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지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처지를 개선시키는 정책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최고의 지향은 존엄의 평등이고 자유의 평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장님께는 아까 말씀 우선 드렸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고유의 통계 무엇이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필드에서 5년 단위, 연간 단위, 월별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런 통계 뭐가 있다?

○**통계청장 이형일** 작년에 저희가 만든 게 포괄적 연금통계라고 그래 가지고요 연금통계를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각 차주별로, 개인별로 다 모아 가지고, 여러 개의 기관을 다 모아서 만든 게 세계 최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불평등 해소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어 내는 데 유효한 통계, 대한민국에 맞는 통계 혹시 만들고 계신 것 있으세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지금 역동적 경제 안에 사회 이동성, 말씀 주신 게 사회 이동성과 연관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 이동성 통계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널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20%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 연말쯤 아니면 연초쯤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들어 보셨지요? 영 케어러, 혹시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죄송합니다. 잘.....

○**최기상 위원** 그 통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젊은이가 본인의 부모들을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영 케어러라고 하고 그에 관련한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나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장 이형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의 황명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오늘 관세청의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서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 차단과 관련된 관세청의 굉장히 주요한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 계신 관세청 직원분들께 죄송스럽지만 아마 요즘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마약의 경우 예를 들면 다른 포장 이것보다도 더 진화돼 가지고 오징어 다리 같은 데다가 숨겨 들어오는 소형 마약 반입 시도가 있다라는 것도 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지금 미국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글 세서미라는 시즈닝 가루 제품 여행객들이 많이 사 가지고 오는데 이게 양귀비 씨가 들어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금지 대상이라 이것을 단속해 내는 데 관세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화면 또 보시지요.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 물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해외직구와 관련되서,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특송 통관 업무가 엄청나게 과부하 상태로 치솟고 있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보이지요. 이렇게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특송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 물품 처리현황을 보면 엑스레이 판독인력을 포함한 세관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연간 1인당 처리 건수가 5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과 평택세관의 경우에 작년 8월에 근무체계를 일근무에서 24시간 혼업체계로 바꿨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인력에 대비해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일이 너무 많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과부하 문제가 단순히 직원들의 피로 누적이 돼서 건강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통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약 같은 경우는, 결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내는 것 또 안전을 지켜 내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오히려 일의 과부하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데 리스크를 줄 수 있다, 단속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대책이 뭘까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래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다른 장비라든지 첨단 장비 또 다른 나라와의 공조 또 정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황명선 위원 화면을 또 넘겨 주시지요.

필수 경로별로 마약류 단속현황을 한번 보세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5월 까지 죽 나오는데요. 이 숫자를 보면 뚜렷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공여행자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항공여행자, 입국자 수, 단속 건수/입국자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 단속 건수를 볼 것이 아니라 입국자 수 대비 단속 건수를 봐야 정확하게 업무에 하중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황명선 위원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했던 것을 보면 ‘효율적인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감시수행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라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몇 가지적을 했는데 뇌관을 조속히 제거해야 될 시점, 인력 확충, 감시요원 스트레스 완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 저하. 세 번째, 인력 부족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10년 더 전에 나온 것인데 관세청은 여전히 인력 부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같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 10년 전에도 이런 연구의 결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대책들은 앞서 장비나 일부의 인력에 대한 보강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대처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마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력 확충

을 통해서, 첨단장비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래서 저희는 해외직구 급증하고 인천공항 T2 확장에 따른 여행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요만큼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왜 잘 안 돼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황명선 위원 아니, 청장 소관이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정부 전체적인 인력 구조, 인력 수급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뛰어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관세청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기재부와 행안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의 결과도 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 첨단장비도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 행안부, 적극적으로 인력 규모 면밀히 논의하라는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국세청장님, 하여튼 취임을 내일 하시니까 축하드리고요. 인사청문회와 또 오늘 업무보고했던 바대로 엄정한 국세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 5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 첫 번째가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가장 맨 위에 했습니다.

저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했었는데 쌍방울 세무조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궁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대북 관련한 사업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하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조사한,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거라면 제가 지금 바로 연이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쌍방울과 어떤 차이가 있고 세무조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멋쟁해병’ 단톡방 이종호 메시지입니다. 이종호가 계속 등장해요. 아까는 다른 곳에서, 관세청에서도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에도 등장을 해서, 5월 14일 ‘멋쟁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이게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삼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6월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나 유상범 위원의 질의에…… 이 ‘삼부’가 골프 1부·2부·3부의 3부가 아니냐, 군 체력단련장의.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일반 골프장은 모르겠지만 군 체력단련장은 야간 3부가 없다 해서 3부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넘겨 주세요.

즉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삼부토건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의 주가 변화 추이를 보면, 5월 2일 1083원이었어요. 그날 체크하라고 하는 시점의 주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7월 17일에는 5010원이 됐어요. 4.63배로 급등했습니다. 실제로는 삼부토건이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5배 정도로 오를 수 있는 특별한 소재나 아니면 삼부토건의 영업이나 아니면 실적이 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7월 17일에서 8월 사이에 유지되고 현재는 과거의 주가로 폭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쌍방울 대북사업의 광물사업에 의한 주가 뺑튀기와 그에 따르는 수백억의 차익을 실현하고 턴한 그런 그래프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주가조작 의심 대화와 삼부토건 주가 변화를 보면,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한 다음에 5월 16일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한해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고 5월 17일 한·우크라 EDCF 차관 예비협정을 체결하고 5월 21일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기업 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참여 지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5월 22일, 23일 연속 삼부토건은 상한가 30%를 기록합니다. 6월 2일 날 업무협약 체결에서는 또 상한가. 그리고 7월 15일 유럽을 방문해서,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결정됐지요, 폴란드까지 갔다가. 그래서 7월 15일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17일 삼부토건이 202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방문 이후 즉 빠져서 현재는 과거 주가로 거의 수렴해서 내려가는 국면이에요.

이것을 보면 실제로 삼부토건 자체가 실적이나 영업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멋쟁해병’의 이종호 대표로부터 시작된 이 내용으로부터 출발해서 한·우크라 정상회담 또 김건희 여사의 면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렸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겠지요, 현재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쌍방울 주가의 변화 추이와 비슷하다고 보지 않아요?

청장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쌍방울도 이것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지금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요. 쌍방울은 청장께서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저희가 보통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기업이건 혹은 지금 위원님 설명하시는 이런 어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건 일단은 부당한 자금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루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언젠가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업무보고와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정도의 주가 추이라고 한다면, 쌍방울의 주가 추이와 똑같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의 대북 투자를 통해서 쌍방울의 주가가 올랐다가 빠져서 정리된 것과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쌍방울을 조사했다고 하는 근거와 이 삼부토건과 삼부토건과 연관된 이종호 전 대표, 투자자…… 그리고 삼부토건의 가장 나쁜 부분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삼자가 투자한 게 아니라 삼부토건의 대주주들이 연관됐다고 하는 의혹이 거의 90% 이상이라고요. 즉 그것은 한마디로 공정한 시장 질서, 공정한 자본주의 질서를 깨는 가장 나쁜 범죄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런 정황을 인지하거나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국세청은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저희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들여다보게 되고, 다만 지금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세금 탈루 혐의, 그러니까 차명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논란이 됐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자금 유출이 이슈가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명백한 내용이 결합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하든 검증을 하든 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김영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통계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입장에서 지금 통계청의 주요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통계청의 역할이나 중점적인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영역은 민생이나 역동경제, 인구 이런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외부로부터 간접과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계청의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청장님,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지낸 강신욱 전 청장, 통계조작 혐의로 재판받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구자근 위원** 혐의의 쟁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대폭, 그게 한 86만 명 정도 폭증하니까 이게 달라진 조사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강 청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시받은 대로 통계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조작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기소된 내용은 현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언론에 다 나오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앓아 계신 청장님이나 뒤에 배석해 계신 간부님들이나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거다, 그렇게 보이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자괴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통계법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최대 3년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시민단체 고발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수사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고 홍남기 전 부총리 포함해서 수사 진행 중인 것을 몰라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 통계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통계조작 지시를 했는데 그 전후 사정을 다 간파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통계청장 이형일 제가 알기로 국가채무 비율……

○구자근 위원 수사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재판받는 사정은, 그간의 사정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예, 언론을 통해서……

○구자근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가 통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것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인식하도록 해야 되겠다, 알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정부의 단호한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조작 논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전 의원께서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떼어 내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격상하고 또 기재부장관이 지금 겸임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그 부분을 국무총리가 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계청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도 확보하고 또 독립성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통계청장 이형일 통계청의 격상과 관련돼서 아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는데 논의 끝에 채택이 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이슈는 여러 정부 부처나 또 국회와 계속 더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현행 통계법 체계 내에서 관련된, 아까도 말씀하신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라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통계작성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알리고 또 교육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청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기재부 입장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통계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통계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입장을 견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할 때 이전 통계청장님, 그러니까 통계청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가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구자근 위원 지난번에 통계청을 통계처로 격상할 때 부처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당시에 통계청에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찬성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찬성 당시에 그때 보니까 한 훈 통계청장이네요. 그렇지요? 그분도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차관보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구자근 위원 지금 청장님도 기재부 차관보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구자근 위원 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통계청 격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도 중립성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홍남기 전 기재부장관의 사례만 보더라도 통계청 중립성 조항이 완전히 무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청 격상 반대하는 논리들은 궁색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적, 재정적, 조직적, 전문적 그리고 투명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돼서 국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통계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통계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관세청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조병노 경무관 모른다고 하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단 한 번도 통화나 문자나 이런 것을 나눠 본 적이 없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인천세관장하고 청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아마’가 뛅니까? 통화한 사실을 몰라요?

○관세청장 고광효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몇 번, 언제 했는지……. 왜냐하면 제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라기보다는 지역세관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을 한정 지어서, 청장님의 7월 달에, 작년 7월에 오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7월 초에 왔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시작 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통화, 그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와 통화하면서 발생했던 그 시기, 그 시기에 업무보고는 받으셨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 그 상황을…… 몇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몇 번 받으신 건지 기억 안 나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것을 몇 번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녹취록을 보면 특별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무관이 관세청 조직원도 아니고,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 그다음에 10월 14일에는 ‘관세청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세관장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천세관?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 그것은 인천세관장……

○김영환 위원 아니면 특별히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당부도 없었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뭐랄까, 그것을 빼라든지 아니면 뭘 하라든지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고요.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보고만 들으셨어요? 뭐 특별히 얘기한……

○관세청장 고광효 사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당연히 그때는 아마……

○김영환 위원 그러면 특정한 지시나 업무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전에 보도자료에서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 그 보도자료 빠진 것은 며칠이냐 하면…… 그게 며칠이지요? 10월 10일 아닙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보도자료를, 그 시기 근처가 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영환 위원 여하튼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는 것에, 그 경무관과 전혀 통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그다음에 인천세관장 통해서 특별한 업무 지시나 업무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업무 관련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관세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한 것……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 그 상황에서 어떤 걱정을 제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김영환 위원 아니, ‘할 수 있겠지요’가 아니라 본인이 한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한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 그때 한 7~8개월 전에 어떤 특정인하고 논의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없어서.

혹시 이종호 씨는 아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전혀 모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전화 통화도……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 두 분은 전혀 모르고……

○김영환 위원 문자도 전혀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관세청장 고광효 그 두 분은, 조병노……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전혀 모릅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유창 계열사 실적이 모듈러 교실 구매·임대 사업에, 이게 거의 독과점 시장이더라고요. 이게 조사한 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계약금액 9100억인데 거기의 한 3000억 정도를 유창 계열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아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유창 관련된 지분율 지금 확인하셨지요? 그리고 송천이앤씨는 결국에는 제가 지분율을 확인 못 했습니다. 다만 사내이사가 조용선·조우제 이렇게 두 분이 계신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유창 관련해서는 원래 (주)유창이 있고요. 유창이앤씨, 아들로 지분이 60% 넘어가고

유창이앤씨가 또 인적분할을 합니다, 유창엠앤씨로. 이 관계가 복잡합니다. 서로 일감 몰아주기 하고, 아까 봤던 송천이앤씨하고 유로직스라고 유통하는 회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들이 많습니다. 이것 DART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주소가 같아요. 유창, 유창이앤씨하고 인적분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같아요. 그다음, 유창 화곡 물류센터하고 송천, 여기서 말하는 송천은 담합 가능성으로 조달청에 올라오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양천구 목동 빌딩에 유창하고 유창이앤씨가 같이 있어요. 주소가 같습니다.

이게 동시입찰인데요. 유창이앤씨, 송천이앤씨 서로 내부거래 하고 있는 거 아까 보셨지요? 지금 조달청, 또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유창이앤씨, 송천이앤씨. 이게 하나의 회사가 들어가면 유찰되니까 유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승엔지니어링이라고 또 계열사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같은 내부 회사로 보입니다. 실적이 한 1638억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아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조달청이 지금 현재 지분관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단적으로 어떻게 이게 담합이다 아니다를 말씀하셨지요, 아까?

○조달청장 임기근 ‘아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하십니까?

○김영환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조달청장 임기근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담합 문제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혁신시제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 위원 사실은 공정위가 주 담당인데 이런 내부거래, 같은 주소, 같은 회사로 보이는 조달청 계약사업에 들어오는 이 입찰 형식들…… 조달청에서 기준에 계속 담합 관련해서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조달청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장께 질의합니다.

조달청에 청훈이 있어요? 조달청 청훈이 있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조달청의 청훈이라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금년도 업무 목표는 두 가지 확실하게 있습니다.

○ **김태년 위원** 청훈이 없어요?

○ **조달청장 임기근** 저희는 일단 금년도는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두 번째는 백 투 더 베이식입니다.

○ **김태년 위원**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조달 뭐 이런 것 없어요?

○ **조달청장 임기근** 아,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의 백 투 더 베이식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 예.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가 없도록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국정감사 때나 또는 업무보고 때마다 조달청에 주문하는 것은 조달청이 단순 물자를 조달하는, 제공하는 그런 역할에서 이제는 더 뛰어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자의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 **조달청장 임기근** 그런 요구와 요청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질의 주시는 위원님의 취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달청이 그런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나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일자리의 대전환과 또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 등에 따르는 새로운 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대전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단순히 재정의 효율성에 기반한 그런 전통적 역할 못지않게 공공조달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 기능 확대 이런 게 동시에 고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도 동의하신다는 뜻이지요?

○ **조달청장 임기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100% 동의합니다.

○ **김태년 위원** EU나 유엔도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달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심지어 2030년까지 이게 아주, 보면 2030년까지 공공조달에 ESG 항목별 평가를 반영하겠다 이런 구체적 목표까지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 **조달청장 임기근** 예.

○ **김태년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미 2016년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조달청법이 많아요. 제6조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이런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ESG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조달청장 임기근** 예.

○ **김태년 위원** 그래서 조달청이 2022년 5월에 ‘공공조달 ESG 시범 도입을 위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조달 절차에 반영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뿐만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ESG 평가 기준에 실체가 없다 이거지요? 맞나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미 2021년 산자부가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된 K-ESG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다 ESG 경영을 모토로 삼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재부가 2023년에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ESG 요소를 강화하겠다 이런 지침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평가 기준에 실체가 없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시범 도입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고부가가치의 기술 관련 계약에 주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이것은 18년도고, 그다음에 LH의 이른바 순살아파트 담합 이후에 제정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이것은 올해 만든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물품 또는 시설공사의 최저가격과 경영상태들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이런 평가방식만을 따르고 있는 게 현재 실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목을 보면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이런 노동과 관련된 항목들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경제, 환경,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조항이 없어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혁신조달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 조달청도 혁신조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성장·생태계 육성, 탄소중립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이런 데 대한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공공조달에 균형되게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특정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하거나 제외하는 문제는 다른 지표들하고의 관계도 봐야 되고 측정 가능한지의 여부도 봐야 되고 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새로운 평가항목을 추가했을 때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취지는 저희가 100%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인증이나 신인도를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비를 할 때 그런 정신을 가급적 두루두루 반영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관세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 세관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감찰이 있었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감찰했지요? 감찰보고서 봤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감찰보고서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9월 27일 감찰보고서 나왔던 데,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이, 감찰보고서를 보고 강도 높은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이 좀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 내부적인 근무일지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됐다고 보지만 경찰 측에서 갖고 있는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쉽사리 우리 직원이 혐의가 없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혐의가 있다 없다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경찰 수사 보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답변에서 ‘관세청 직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답변을. 전체 직원의 사기 문제가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만 이렇게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지켜보고 팔짱 끼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관세청은 특히 이와 관련해 준사법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그 당시의 감찰 결과로 보면 마약 범인들, 피의자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동선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탑승한 항공편이 검역 일제검사로 지정돼 가지고 검역직원이 1번 캐러셀(carousel)로 안내한 것을 세관직원이 조력한 것으로 오인도 가능하다. 또 피의자는 4·5번 검색대의 남자 직원이 검사를 목인하였다고 했는데 그 4번 검색대에는 여직원이 근무했고 5번 검색대에는 근무자도 없었다 이런 사실과 지금 충돌이 되잖아요.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남자 직원 5명은 입국장 환영홀을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해 가지고, 출입기록도 확인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그래서 지목된 3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1명은 당일 연가를 갔다 그리고, 그리고 세관 복장을 입은 2명이 안내했다 그러는데 지목된 그 3명 중에서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해명할 것은, 국회에도 보고할 건 보고하고 또 언론에 해명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가지고 이 부분에 트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지요 이 사안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일찍 문제를 조사했다면. 이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당시 알리바이만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서 출입기록 같은 것이, CCTV 같은 것이 삭제되면서 알리바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게 돼 버린 거예요, 기간을 끌면서. 거기다가 7월에, 그 당시에 내사를 했다 그랬는데 빨리

했으면 그런 게 가능한 문제였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말이지요, 사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관직원들의 범죄냐 아니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두 번째 문제 말이지요, 수사 방해라는 이 의혹이, 외압 의혹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사기꾼의 허세, 녹취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놀아나는 그러한 한심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1년 동안 밝혀내지도 못하고 하는 것 보면 후자일 가능성 대단히 높거든요. 진실을 규명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지요.

이것 한번 보시지요. 공항경찰단장을 지낸 경무관이 공항 세관장의 부탁을 받고 얼굴도 모르는 경찰 경정에게 전화를, 외압 전화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고 상식이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경찰 경정에게 전화를 해서 ‘야당만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런 말 간 크게 얘기했다? 이런 수사 방해가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런 의혹 자체를 제기한 게 블랙코미디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말이지요, 세관직원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는지 가담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외압 전화를 한다? 이런 블랙코미디 본 적 있습니까?

거기다가 주가조작 피의자, 사기 피의자잖아요. 사기 혐의자가 경무관 인사를 챙기고 자기가 해병 사단장을 구명하고 VIP에 전화하고 그걸 해병대 단톡방에서 떠들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마약범죄의 문제는, 관세청도 사법권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위원님께서 지금 화면에 띄워 주신 내용들은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 저희가 해명한 사항이고요. 대외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안 하고 주장은 안 하는 것은 아직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수사 중에만 저희가 해명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에 대해 다른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에게 이런 부분을 브리핑하고 설명을 하고 엠바고 요청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이상한 정치 공세로 번지고 하는 이런 것을 차단하고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다시 회복하고 이럴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해외직구 문제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중간하니까 이거는 그냥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박홍근 위원** 우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2020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소위 절세를 미끼로 영세상인들을 노리는, 탈세 부추기는 불법 PG 업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로부터 한 2년, 그러니까 2022년에 국세청이 연말에 기획점검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거치고 영업이 힘들어졌는데 2020년, 21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절세 홍보에 넘어가서, 속아서 실제 불법 PG 단말기를 이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사후 단속을 하면서 지금 훨씬 더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 됐어요. 물론 성실신고 안 한 자영업자들 탓,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정부도 늦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불법 PG사 상대로 또 민사소송도 같이, 민형사소송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할 때 PG사 이용매출을 누락 없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내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관련해서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불법 PG 업체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적발하고, 특히 지금 부가세 신고가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 계속 신고 좀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일단 최대한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생각하니까 개인회생이나 또 새출발기금 신청한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폐업 전까지 조금이라도 벌려고 영업을 하는데 이런 부실 차주들이 카드 매출 대금 압류 등 상계처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소위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금감원하고 상의해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통계청장님,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감사원의 통계청 통계조작 감사 끝났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홍근 위원** 지금 몇 년째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2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 감사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특이한 사례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박홍근 위원** 총선 한 달 앞두고 지난 3월 달에 대전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있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무혐의고 강신욱 전 청장만 기소했어요. 감사원 통계조작 중간발표에는 통계적 논란의 핵심인 가계소득 통계의 표본 조작, 이것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예 실체가 사라졌고……

이건 아마 지난번 국감 때도 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중간발표를 근거로 검찰이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는데 이 중 통계청 관련된 가계소득 통계, 고용 통계는 아까 앞서 질의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혐의로 전 청장이 지금 기소된 것 아닙니까? 본인은 또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이 잡듯이 통계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바탕 난리 치고 있으면서 결과물은 도대체 뭐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 한번 못 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이? 직원들은 정말 진짜 그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 있는 통계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불명예를 다 뒤집어쓰고 있는데 전문성과 자부심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통계청에서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직원들을 다 낙인찍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는 피감기관으로서 현재 아직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2년 가까이 감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조달청장님, 업무보고 자료 봤더니 조달거래에 따른 부담은 경감해서 민생경제에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되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납품단가연동제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은 지금 이게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장에는 현재 도입이 안 되어 있지요. 국가계약법상 지금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는데 이게 조정요건도 까다롭고 또 증빙도 까다로워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하소연만 하는 상황입니다.

조달청에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이것도 첫 번째 접수 내용이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얘기를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납품단가연동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 부문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변동제하고 단품 슬라이딩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그래서 납품단가연동제를 과연 공공 부문에 적용이 가능한지 혹시 기준에 있는 제도와 충돌 여부는 없는 건지……

○**박홍근 위원** 기재부가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결과가 이제 연말쯤 나온다는데 저는 이런 현장의 중소기업 목소리를 조달청이 제대로 듣고 있는 거라면 기재부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오히려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임기근 기재부 목소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박홍근 위원 이게 국가재정법상의 시행령만 개정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하는 과정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달청은 현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재부에 전달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제도와 정합성, 단품 슬라이딩 제도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이 제도를 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얘기와 판단을 정리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같은 말씀은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관세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감 앞두고 인천공항세관장한테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아니요,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이 그런 사안이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먼저 보고를 했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홍근 위원 먼저 이 문제가 국감에서, 경찰청의 보도자료 브리핑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우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게끔 해라……

○관세청장 고광효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박홍근 위원 또는 어떻게 발표하려고 그러는지 알아봐라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관세청장님이 먼저 알아봤다는 겁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아니요, 그걸 알아봐서 그게 국감 보도자료에, ‘제가 누구한테 알아보니 국감 보도자료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라고 지시를 먼저 안 했는데 먼저 본인이 보고를 해 왔다 이 얘기, 이게 확실한 겁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국세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아직 취임식은 안 하셨다고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저하고 하신 1호 지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것 잘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정부 여당이 세제 개편 작업을 하고 지금 공표를 할 것 같은데요.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관련해서 국세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이 최고세율이 50%,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대주주, 최대주주 할증을 하더라도 그것은 세율이 할증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가액이 할증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은 여전히 50%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명목세율은 이런데 혹시 우리나라 실질 상속세율,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여러 가지 공제를 빼고 하면 실질 상속세율은 최고 명목세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분모를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걸 빼고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세표준이 나왔을 때 과세표준을 분모로 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표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우리가 보통 어떤 재벌, 어떤 분이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과표가 아니라 이 총상속재산을 일반분들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총상속재산을 분모로 해서 총결정세액을 나눠 보니까 2019년도 14%, 2020년 16.9%, 2021년 16.1%, 2022년 28.4%, 2023년 21.2%로 최근 5개년도 실질세율 평균이 21.6%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자산가가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세가 50%면 '50억 정도 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1억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산 방법으로 해서 계산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물론 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연도 평균이 36.5%입니다. 이것도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한 걸 하면 상위 10%만 35.6%고 상위 20%는 다 10%대입니다, 10%대. 그리고 과세표준을 분모로 하는 경우는 상위 50% 미만은 다 10%대입니다.

이런 실질 상속세율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50%다, 최대주주 할증을 하면 60%다 이렇게 하면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접근하면서 이걸 낮추는 부자감세를 하는 것은 과세 세수 평크가 2년째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세 중립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실효세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명목세율 말고 실효세율을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말고 보유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외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국 사례 좀 띄워 봐 주실래요.

청장님, 작년에 시세 37억짜리 미국의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가 부과된…… 260만 달러인데 며칠 전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 37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유세가 작년에 얼마 부과됐나 하니까 3만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사례를 다시 언급해서 좀 미안한데 청장님 작년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PPT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세 40억짜리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납부하신 종부세가 25만 5000원이더라고요. 맞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상속세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산가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상속세 하나만 가지고 이주를 결정하겠습니까? 상속세와 보유세 부분,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전 세계와 OECD 자료인가 어디엔가 의하면 0.15고 미국이 한 영점……

그 표 좀 보여 주실래요.

우리나라 0.16, 미국이 0.99, 한 1% 정도가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0.87이고요. 8개국 평균이 0.54인데 우리나라 보유세의 비율이 0.16입니다.

외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상속세 말고 보유세의 부담 이런 것도 다 같이 감안해서 자산가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관세청장님, 아까 전에 사후 보고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차규근 위원 인천공항세관장께서 전화한 이후에 사후 보고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행정부에 근무를 좀 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산하기관 기관장이 전에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경찰 간부에게 물어보는 것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먼저 전화하고 사후 보고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정말 사전에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러면 제가 그 경무관을 다 알고 이랬다는 말씀을 하시는……

○차규근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모르실 수 있겠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러니까 제가 사후에 보고받은 것은 제가 아는 무슨 경찰……

○차규근 위원 하여튼 사후 보고받은 것이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사후 보고받았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그 사건 불거지기 전이나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라도 혹시 청장님이나 아

니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전화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거나 문서로 정보 보고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전혀 없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관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관세청이 경찰청에 수사한 내용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 관세청 직원들이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타 기관의 보도자료에 들어간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A 기관이 B 기관의 허락 없이 B 기관의 어떤 내용을 보도자료에 낸다면 충분히 상호 협조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기관 차원에서 공적으로 알아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장님, 전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조 경무관에게 전화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청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류의 85%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에서 차단한 불법 마약류가 약 1417kg입니다. 이게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매일 약 2건씩 마약 밀수를 관세청에서 지금 잡아내고 계신 거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성훈 위원 결국 마약 단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마약 단속반원들의 열정과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1년 넘게 보도가 되고 있고 직원들은 청장님 말씀처럼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관세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는 특정 개인이 혹시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휴대폰 검사 직원의 근무 구역을 랜덤으로 배정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작년 1월에 몸에 숨기고 온 상당 수준의 마약을 적발해 내지 못한 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경찰청에서 그것을 적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밀리미터파 검색기라든지 AI, CCTV 그런 첨단장비를 보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직원의 부조리가 만일에라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염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성훈 위원** 다만 직원들, 특히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마약 단속반원들의 사기가 이번 일로 인해서 저하되지 않도록 관세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성훈 위원** 국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청장님,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보겠다,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시효와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얼마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일단은 어떤 과세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이러한 정도의 이슈가 나와서 과세가 되려면 우선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다 되어야 됩니다.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게 일심에서 될 수도 있고 이심에서 될 수도 있고 삼심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법령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법령에,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중여세 대상이냐 소득세 대상이냐 혹은 상속세 대상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법령별로 과세요건이나 시효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갖다가……

어쨌든 과세라는 것이 과세라는 걸로, 과세만 하고 그치면 너무나 쉽지만 그 과세가 춤춤하게 돼서 나중에 불복 과정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검토를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일단 확정되어야 됩니다.

○**박성훈 위원** 청에서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능적 역외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한 것을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한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인 전재국, 노재현의 역외 탈세에 대한 과세를 지금까지 총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그분들 관련해 가지고 과세를 얼마나 했나 이런 것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의 역외 탈세라는 부분으로 국한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전체 총 과세금액이나 또 그중에서 역외 탈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역외 탈세 관련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누구든 반드시 한번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박성훈 위원** 청장님, 역외 탈세 의심자들을 2013년에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182명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8명에 그치고 검찰 고발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받은 적도 있지요.

이들에 대한 과세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도상에 어떤 불비한 점이 있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감사원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일단 외국에서 어떤 탈세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건, 한 건 따라가서 그게 진짜 세금하고 관련되는 내용인지를 다 하나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과세가 될 수 있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 아까 50%라고 답변하셨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실질 세율, 실효세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국세청장 강민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차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은 드렸는데 실효세율도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명목세율을 비교하려면 명목세율로 비교해야 되고 실효세율을 비교하려면 실효세율끼리 비교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효세율로 가지고 가고 다른 나라는 명목세율로 가지고 가면 이게 비교가 잘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가지고 계신, 다른 나라의 실효세율 그것을 조사하여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여러 가지 자료 다 분석해서……

○**박수영 위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은 엄격하게 중립 유지해야 되지요? 통계법 27조의2 제1항 잘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혹시 몰라서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리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엄격한 중립이 요구되고 있고 별칙조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우리나라 2019년에 일어났었던, 비정규직 증감 추이 이 표 한번 보시면…… 2019년 사건을 제가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 올봄에, 얼마 전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자료도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데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무려 87만 명, 정확하게는 86만 700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자료가 죽 나왔는데 이 기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통계청장 이형일 그것은 이 통계…… 저희가 통계를 발표는 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설문조사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감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정규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많은 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돼 가지고 해고된 사람도 많아지고 키오스크로 바꾸고 이러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또 해고되고 키오스크로 바꾼 이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그때 논란이 됐던 사항이 바로 이거지요. 통계가 담당자들이 만드는 초안에는, 경활인 구조사 초안의 오른쪽에 보면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3.4%p가 늘어났다, 총 748만인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표한 안, 일주일 새에 바뀐 겁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발표한 안은 전년 동월 대비 얼마가 늘어났다는 게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통계 조작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사실은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9년도 것만 전년 동월 대비 몇 % 올라갔는가가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2018년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 0.1%p 늘었다고 나와 있지요.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것은 2019년 다음 해입니다. 2019년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8년과 똑같이 2020년에는 다시 전년 동월 대비 0.1%p 줄었다고 나와 있지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2.1%p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딱 2019년에만 증감 내역을 삭제한 인포그래픽을 뿌리게 된 것이지요. 언론에 배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또 추가로 받아 보니까 보도자료 내용 자체에도, 인포그래픽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보도자료 내용 자체에도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면…… 청장님, 보이시나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보입니다.

○박수영 위원 보시면, 원래 실무자들이 작성했던 초안에는 전년 동월 대비 얼마가 늘었고 이게 3.4%p 상승한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주일 뒤에 최종 발표한 안에는 증감 내용은 전부 다 또 삭제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보도자료의 군데군데, 발표자료의 군데군데 보면 실무자들이 만들었던 초안하고 최종 발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감률 자체를 누군가는 좀 감추고 싶었다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게 2019년 사건인데, 저는 겸찰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봄에 겨우 기소를 했는데 전 통계청장님하고 청와대 수석 이렇게 고위직들을 기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4명 기소했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별하고 형사별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 자체조사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에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했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무관이나 하위 직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과장, 국장, 실장, 차장 이런 분들은 그사이에 보니까 퇴직들을 곱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 행정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행정별은 무조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곱게 다 퇴직해 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당시 과장 하시던 분이 그대로 과장 하고 계시는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청장님께서 기관장으로서 잘못하시는 거다, 물론 지금 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저는 조직의 행정별과 형사별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공직 기강이 바로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기소됐으니까 재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통계청장 이형일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도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일단 유보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결과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영 위원 이걸 5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질의자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숨 좀 고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박수민 위원부터……

○위원장 송언석 순서를 바꿔?

○박수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조달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들으시겠지만 혁신조달에 대해 다양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될 혁신성장의 길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활용되는데 초반에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길을 많이 열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기관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거기서 실제 수요기관에 의한 적자생존형 검증이 일어나고 그래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이게 혁신조달의 대상인지 아닌지 조달청이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혁신을 심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샌드박스 방식으로 일단 혁신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놓고 그것이 실제 유효하고 현장의 필요에 입각한 혁신인지를 적자생존형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이런 적자생존형 혁신조달의 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던진 얘기이기 때문에 코멘트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주시고요,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박수민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처음 본질의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혁신과 품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혁신조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울러 시범구매역 할도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이걸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혁신제품을 현재 지금 제도가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수의계약도 되고 면책도 되고 결국에는 시범구매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게 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성이나 공공성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100% 자율로 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은 기존의 많은 인식의 관습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이 그동안 다뤄 왔던 업무와 결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박수민 위원**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과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년, 30년 전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도 자체가 없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감 몰아주기라는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과세를 하자, 그것이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이니까 중여 비슷하게 보고 일단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다면 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건 왜 생기는 거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세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간단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감 몰아주기 중여의제 과세 취지가 부를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세금 측면에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정해서 여기에 걸리면 기계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종의 변칙적인 부의 중여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라는 걸 떠올린 것인데, 본 위원은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합법적이고 양성화된, 투명화된 부의 이전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편법적인 부의 이전의 유인이 늘어나고 우리는 그 유인을 없애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부의 이전의 길을 넓히기보다는, 그건 여전히 좁혀 놓고 과세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하실 때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아까 최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양쪽이 다 어느 정도씩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안도걸 위원** 고액 외국 스포츠 인사에 대한 공정한 과세 관련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아시지요? 클린스만 감독이시지요. 성적 부진 또 우리 선수단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도 하차하셨지요.

그런데 이분께서 한국 감독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 국내에 머물렀던 게 78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을 못 채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혜택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입으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180일 이상 거주를 했다면 거주자로 돼서 이분 같은 경우 연봉과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매겨지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과세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로 했을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경우하고 비거주자로 됐을 경우에 절세된 금액이 물경 23억에 이른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비단 이분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최근 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 체류 중인 예술·음악·스포츠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전문인력 외국인들이 한 4500명 되시네요. 그리고 이게 지난 20년에 비해서 50% 정도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 당국에서는 국내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과 함께 어떻게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조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저기 잘 아시지요? 우리 혁신제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지금 정책을 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혁신제품 선정현황 좀 살펴봤더니 지난해, 올해 선정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혁신조달이 지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였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정책 의지가 좀 시든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지는 않고요. 혁신조달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하고 관련되는 문제니 이것은 정권을 뛰어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통파율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이렇게 낮아진 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이 선정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 제기들이 23년도에 상당히 폭증이 돼서 23년 제도개선……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제품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해서 검증을 철저히 한다 이런 거겠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혁신제품이라는 것은 시장 진출하는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제품 선정 절차가 너무 길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 보니까 공모부터 혁신시제품 지정까지 삼사 개월, 제품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인증 판정까지 평균 664일이 소요된다고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이렇게 혁신제품이 너무 오랜 검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끌면 결국 노후 제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런 요인이 선정이 조금 부진한 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이러한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관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중국산 직구가 급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21년도에 1.4조였는데 작년에 3조 2000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해물품 반입도 크게

늘고 있고 금년 상반기 동안만 보더라도 17만 건에 가까운 유해물품이 적발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막는 데도 지금 관세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기재부에서 중국 직구판매업체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그려네요. 통관 절차 간소화가 이유였다고 그러는데 아마 관세청에서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자원이 부족할 판인데 통관
절차 간소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인지, 그리고 관세청의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우선순위에 혼선을 주는 게 아닌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을 주십시오.

○**관세청장 고광효** 글쎄,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하고 마약이나 유해물품을 검색
하는 문제는, 2개가 약간의 상충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할수록 통
관 절차가 지체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2개를 다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정보에 의한 시스템을 구
축하거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거
든요. 그렇게 되면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통관 지체를 좀 더 줄이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인프라도 확대하고 근무체계도 개편을 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을, 26년 정도 되면 사업 발주가 될 텐데 그게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해제품 말씀하셨는데 그 유해제품은 결국에는 저희가 다른 기관과의 협조,
그 기관에서 어떤 유해제품을 분석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가 그
걸 선별적으로 반입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오전 질의 계속해서 통계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국세청장님께 질의하
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오늘 논의하는 것 중에 통계 조작 이런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한 말
씀만 드리고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봐 온 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서, 검찰권의 행사나 감사원의
감사 그 자체가 정치 편향이 있어서 그게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차규근 위원님도 실제 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였는데 표적 감사로 문제 제기돼 가지고 실제 이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 역으로 공수처에 기소
가 돼 가지고 그 관련자들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서로가 지켜보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증거를 묻을 수는 없고 사실대로 조사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들 관련해서 여쭤보면, 가계부채 통계에 관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현재 화면에서 보다시피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금융위에서 쭉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지금 가금복에 별첨 자료로 추가로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부채는 통합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희가 이것 보면, 그동안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저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정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통계청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공식 통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하겠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도 청장님 말씀하신 게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완하겠다 했는데, 분기별로 상세 통계 발표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지금 금융위나 통계청 또는 기재부와의 관계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좀 해 보겠다, 실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정책을 어떻게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그것은 계속 금융 당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구 단위로 또는 표본이 아닌 전수조사로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조사가 돼 있어야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이것 4년 내내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이라,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아니냐 내지는 실제 그 데이터가 적절하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고 또 저희 의원실과 논쟁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꼭 이 가계부채 통계에 대해서는 개선된 안을 올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가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보겠습니다마는 가구 단위로는 지금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일정 부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득과 자산을 아는 것은 현재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의원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한번 대안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면 오히려 한국은행 통계라도 인정을 해 주시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장님께 지난번 질의하다가 만 것 더 추가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편법 증여 논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서로 설명과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관련 자료를 보면 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편법 증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것들에서 공방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그 이후에 부채를 어떻게 상환했느냐에 대해서 해명이 안 돼서 사실상 증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3년 말 기준으로 했던 것, 24년도에 재산 공개한 것들을 보면 약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현된 것 중에, 중간쯤에 20년 11월 택지매입 증거 출처를 설명한 걸 보니까 모친 증여가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 부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10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만 해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차이는 어떻게 가능하나? 그동안에 돈을 벌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에 대해서 의혹이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견 어떻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지금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자료는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자금조달계획서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채무가 많으면 저희가 반드시 부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다 보면 증여 혐의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언론에 보도된 류희림 위원장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누가 봐도 드러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덮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관세청장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오전 질의에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알리익 스프레스에 대해서 통관·물류업 대행업체의 보관료를 감면해 준 특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윤호중 위원 저도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생겼어요. 관세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때 기재부 외청의 세피아니 관피아니 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를 통해서 퇴직한 직원들이 세운 업체에 또는 협회에 온갖 이권 사업을 수주해 주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문제 제기가 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거의 한 군데 정도 빼놓고, 그동안 한 5년 정도 사이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하나입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거의 직원의 100%가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특히 업체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모두 다 1 대 1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업체 외에는 신청을 하고 있기조차 안 합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대전세관이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을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예외입니다. 그리고 여기 빼고는 100%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저도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화물관리 업무가 공공성은 높은데 수익성이 낮아서 공개경쟁을 해도 개발업만 단독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 기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28개 세관 지정장치장 중 6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타 비영리법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글쎄, 관세청의 답변도 이렇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 10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21년도에는 매출이 400 억을 넘어서기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수익이 없는 사업은 아닌 것 아닌가, 벗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원인 분석을 좀 해 보시고…… 이 분야에서도 뭔가 좀 경쟁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왕 관피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달청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가 순살아파트 문제로 LH 공사가 하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서 이관받아서 하고 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순살아파트 만들던 전관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LH 공사에 대해서. LH 공사는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에는 전관 기준에서 불허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3급에 대해서는 조건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LH 공사가 하던 때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그 것은 그 기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현재까지 그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지금 현재 공공주택하고 관련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온 국민한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LH 업무를 조달청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와 같은 공정이나 품질이나 속도의 문제는 앞으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국민들의 생명, 특히 주거 문제가 걸려 있고 거기에 안전까지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LH가 할 때와 조달청이 할 때와…… 결과는 앞으로 드러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명심하고 있고요. LH 업무를 조달청이 이관받은 후에 훨씬 더 공정해졌다, 아파트 품질이 나아졌다, 계약 체결의 속도가 단 이삼 일이라도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정도 더 질의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오늘 4대 청 업무보고서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국세청장님, 그 안의 내용에 보면 AI 국세행정 원년을 선포하고 AI 국세상담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I 상담사한테 물어봤어요. ‘세금이 더 나왔네요?’ 이렇게 물으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어쨌든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은 챗GPT보다 오히려 솔루션이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20년간 300억 투입해서 홈택스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에 접목할 때 조금 더, 그냥 따로 놀지 말고 계속 청장님도 들여다보고 여기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도…… 그냥 보통 챗GPT보다 더 못한 답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들여다보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달청장님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나라장터를 2002년에 개통해서 지금 현재 20년간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차세대 나라장터를 하는 데 AI·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다음에 이형일 통계청장님도 보면 초기대 AI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관세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로 스마트란 말이 들어가다가 이제 디지털혁신(DX), 이제는 또 AI라는 모든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게 자칫 수박 겉핥기식, 오히려 속 빈 강정이 되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행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국민이 약간 우매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관세청도 안에 보면 AI 기반 우범선별모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재정 지원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도 AI 솔루션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4대 청장님은 우리 기술, 우리 중소기업들이 AI 관련해서 오는 것들을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적절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 잘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통계청장 이형일** 예.

○**이인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는 제가 저거를 질문해 봤었어요. 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왜 질문했느냐 하면 무역협회나 수출입하는 분들이 원산지 관련해서 굉장히 좌왕우왕하고 있는데 물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원산지정보원에다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성실하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저도 역시 질문해 봤습니다. 하니까 계속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관세청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업무보고를 질의하고 나니까 이제 원산지정보원의 모습이 결국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으로 전환한 초기라서 사업 수행하는 데 부응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업무 방식을 벗어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 굉장히 적극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오른쪽에 보면 신통상규제 관련 원산지 연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 또 CBA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관리 기능을 개발하겠다, 체약국에 대한 FTA 이행 모니터링을 하겠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을 하겠다, 굉장히 신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관심과 성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렇게 산하기관이 새로운 출연연으로 전환되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보고는 들으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이인선 위원** 출연연으로 전환되면 모든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 산하에서 이 기관들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청장님 꼭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국세청장님.

○ **국세청장 강민수** 예.

○ **임광현 위원** 금년 5월 누계 세수실적이 얼마지요?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한 걸로 돼 있고요. 작년에 56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에 올해 5월 세수진도율도 최저 수준입니다.

청장님,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얼마지요?

○ **국세청장 강민수** 357.1조 원입니다.

○ **임광현 위원** 예, 357조 원입니다.

작년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 **국세청장 강민수** 335.7조 원이었습니다.

○ **임광현 위원** 맞습니다.

청장님, 한 30년 국세행정 하셨던 감으로…… 이게 작년보다 소관 세입예산은 더 늘었는데 5월 누계 세수실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국세청장 강민수** 달성 힘들 것 같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럴 것 같지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저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국세청이 노력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까?

○ **국세청장 강민수** 일정 부분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세무조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의 노력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국세청장 강민수** 일단 조사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 부분은 한 2% 정도고 나머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의 노력세수 비중이 그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노력세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이 정세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평크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세청의 책임, 그러니까 세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부자감세가 저는 과세 기반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세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행사들이 이제 뭐가 남았지요?

○ **국세청장 강민수** 일단 7월 달에 부가세, 이번 달 진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예납이, 크게 여유는 없지만 중간예납이 좀 중요하게 있고 나머지 또 소득세 중간예납도 남아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중간예납을 내는 방식이 납세자분들이 본인

한테 유리한 방식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추계해서 세금을 낼 때 좀 더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법인세, 그러니까 작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22.9조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한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재작년이 31.3조 원, 작년이 22.9조 원 그 정도 사이 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재작년보다 많을 것……

○국세청장 강민수 딱 정확하게 그 범위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올 상반기에 아무래도 상장기업의 영업 실적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예납 추계할 때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지금 중간예납이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하나는 직전 연도 법인세 대비 2분의 1을 내는 방식하고 금년 상반기 가결산을 해서 내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은 그중에 유리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임광현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금년도 세수 때문에 지금 국세청에서 중간 예납에 있어서 좀 독려를 하다 보면 기업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될 중간예납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배임 문제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수 상황이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로 극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징세행정을 강화했을 경우에 그게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징세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잘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 방향 중에서 추진전략에서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벅,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이렇게 한 것도, 이게 맨 앞에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쨌든 조달청이 정부 수요를 민간기업에 연결하는 이게 과거 전통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해 갖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약자기업들,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고 발굴하고 해 나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저는 청장이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에서도 대개 공공정책 또는 혁신성장

이런 걸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달청의 이 역할이 훨씬 더 강하게 또 일관되게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잘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혹시 서울대 이정동 교수 아세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축적의 시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성호 위원 그렇지요.

읽어 보셨지요, 이것?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기술혁신이라든가 어떤 혁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을 해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축적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읽은 책 중에 보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의 정책,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 놓고 아홉 가지 과제를 얘기하고 그중에서, 여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성호 위원 여기서 결국 공공구매력이 산업 정책이라든가 국가기술 정책을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성호 위원 그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보충하자면, 어쨌든 내자구매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성호 위원 이게 2010년대 말에는 80%가량이었는데 최근에는 75%가량으로 떨어졌는데 원인을 분석해 갖고 중소기업 내자구매의 비중이 좀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니까 21년, 23년에 숫자가 한 75%로 낮아졌는데요. 24년에 다시 77~78%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특이 요인이 좀 있습니다. 백신이나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보다 주로 이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특이 요인으로 인해서 21년에서 23년까지 비율이 이렇게 약간 낮아졌다가 24년에 조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진입 단계 그리고 진입한 후에 여러 가지 범부처 협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하여튼 청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 갖고 그런 혁신적 기업들이 일반 경쟁시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추적하고 점검해서 더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들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요인 때

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조달청에서 연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벤처나라 등록업체나 판매금이 조금 정체됐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 물론 그게 조금 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있는데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장이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달청의 보고에 보면 국내에서 검증된 수출이 유망한 조달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억 3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는데 이 실적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수출 실적이지 해외조달의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해외조달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조달청장 임기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국세청장한테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정성호 위원 법률자문관 제도 있잖아요. 법률자문제도 관련해 갖고 국선대리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이게 지금 한 건당 얼마씩 내는지 혹시 아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금액은.....

○정성호 위원 이게 지금 경력 3년 이상 세무사·변호사·회계사에 대해서 한 건당 15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아래 갖고서 이게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 선정해 갖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 신청해 주는 제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류만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건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15만 원 받아 갖고서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서비스 제공하겠습니까?

한번 이건 실효성을 좀, 어쨌든 자문제도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보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조달청장님, 업무보고에서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조달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이 뭐고 왜 일반법 제정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현재도 조달 관련된 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현재도 조달사업법도 있고 전자조달법도 있고 국가계약법도 있고 지방계약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 규율하는 건 기술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거고요. 상호 연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명색이 세계적인 조달 선진국인데 일반법이나 모법이 없는 건 지금 상당히 의아한 일이거든요. 아까 김태년 위원님도 질의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공공조달을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략적인 조달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공공조달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대체로 있는 편입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 EU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종욱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재 공공조달 관련법 체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절적이고 산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있고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의 말씀하신 조달사업법이 있고 전자조달법 그리고 개별 특수법제라고 해서 공공시설공사에는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방위사업법이 방사청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법에 여러 가지, 우선 구매라든지 분리발주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조달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기관이나 사업에 따라서 계약 절차나 조건이 상이한 경우도 있고 정책 방향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조달사업자나 관계 공무원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화면은 우선구매제도, 개별법에 있는 우선구매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기부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50% 우선구매하도록 돼 있고 여성기업법은 여성기업제품 5%, 중소기업법은 창업기업제품 8%, 장애인고용법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또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런 법들에도 각종 의무구매 내지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달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실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납품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단인데 조달특례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복되거나 종합적인 고려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시장을 왜곡시키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법,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인데요.

청장님, 현재까지 일반법 제정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현재까지는 금년 4월에 부총리 주재 조달정책심의위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공공조달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추진방침을 이미 천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여러 가지 개별 부처 또는 국회 차원에서 보면 개별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별법과 지금 하고자 하는 기본법과의 위계질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 그런 위계질서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이게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이해관계라든지 기득권 조정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나 기관과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임기근 이게 지금 사실 기재부와 조달청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련되는 법을, 사안들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만큼 여기 관계부처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예.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앞선 질의 순서에서 있었던 질의에 대해서 국세청장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도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거주자인 경우에 세금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법 체계상 아마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짧게 그 과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안도결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대한 간단한 답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장님.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프로 운동선수나 감독 중에서 결국 183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한국 체류 일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20%로 세금이 종료가 됩니다. 이건 국제기준이나 국제법에 따라서 정당한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거주지국에서도 과세가 안 되면 저희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자발적 정보 교환을 통해서 저희 소득자료를 거주지국에 통보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씩, 2년씩 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원천징수가 20%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이 만약에 23년 동안 뛰다가 24년 1월 달에 외국으로 가 버리시면 24년 올해 소득자료가 나왔을 때 이분은 당연히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체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수시부과 사유를 들어서 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저희가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먼저 세금을 떼 오는 방식과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런 분에 한해서 원천징수세율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의 정일영입니다.

조달청장님, 제가 오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혁신시제품 관련된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유창이앤씨 같은 경우는 수주금액이 2194억 원, 모듈러 시장의 한 47.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립식 교실 사업 거기서 한 거, 그 회사에서 한 거 117곳 중에 112곳이 부실시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혁신시제품에 대한 자격유지 적정성 전수조사를 1월 달에 하셨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1월 달에 했을 때는 모듈러 업체, 여기 유창이앤씨는 지금 혁신시제품 업체에서는 이제 끝난 건가요, 3년이 지났으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3년이 지났는데 원래 연장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정일영 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그 회사로? 그리고 1월 달에 전수조사 할 때 문제가 없었나요?

시간이 없어요. 좀 빨리……

아니, 그거 공부 좀 하시고……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3년 연장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연장돼 있어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일영 위원 부실시공 얘기 들으셨어요, 112곳? 상당한 퍼센티지인데.

○조달청장 임기근 그것까지 지금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언급된 건데 청장님이 모르시네요.

그리고 물품 관리 상태 하반기에 점검하도록 돼 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청장님이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일영 위원 마약 관계, 업무보고에서도 마약 단속하는 거, 마약과의 전쟁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증가됐어요, 단속 건수도 많이,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건수 33.2%, 중량은 한 40%, 금액 한 86%.

왜 관세청에서는 마약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올해 6월 기준 해서 적발 중량은 다소 감소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정일영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일영 위원 해외직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 많이 하고, 해외직구 너무 중요한데 해외직구와 관련해서 개인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 개인통관부호가 소위 말하는 MZ 조폭, 제가 작년에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짜퉁, 향수 이런 걸 중국 같은 데서 수입하는데 이 가짜, 짜퉁을 수입할 때 개인통관부호를 수백 개씩 도용해 가지고서……

얘기 들으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일영 위원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실적……

○정일영 위원 청장님들이 전부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더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가서 그걸 이용해서 짜퉁 이런 걸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아는 분도 도용당했어요. 자기는 몰랐지. 그런데 이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니까, ‘세관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매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와서 확인해 보니까 도용당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관세청에 얘기를 하니까 관세청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도용당한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청장님, 그거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서로 주시고, 자료로.

○관세청장 고광효 신고 건수 지금 파악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한 2년 동안 2만 7445건입니다, 도용 의심까지.

○정일영 위원 도용된 것?

○관세청장 고광효 도용 의심까지.

○정일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조치했는지 그것도 한번 저한테 내일 정도까지 주십시오, 자료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일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통관부호가 도용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세청장 고광효 그래서 저희가 제도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고 법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그 내용까지…… 왜냐하면 이게 대포폰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게 나가 가지고 MZ 조폭이나 이런 데서 그걸 돈벌이로 활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나라장터, 좀 늘린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입찰 쏠림 현상 때문에 이게 계속 서버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그 구체적인 개선 방안 좀 주시고.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통계청장님은 비대면 스마트 조사를, 대면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비대면 조사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예,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또 자료 주십시오.

○통계청장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통계청장님, 내년이 센서스 100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개인주의 성향도 확산되고 하면서 조사불응률이 높아지잖아요. 통계조사원들 입장에서는 업무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7% 늘었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역시 불응률이 12.7%까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 중요한 100년을 맞은 센서스를 하는데 신뢰성 높이려면 응답률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가구도 있고 또 개인 보호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강화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를테면 기차 안이라든지 아파트 안에서도 실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는 라디오에도 방송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박홍근 위원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짧게 좀 말씀을 그냥 드려 볼게요.

우선 통계종사자들 있지요, 공무직들. 이분들의 법적 지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체국의 체신업무나 질병청의 역학조사 같은 분들은 그런 지위가 공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 조사 맡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조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예, 저희 통계법에도 보면, 실지조사 항목에 보면 통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근거 규정은 있는데, 그래서 통계법에 공무수탁사인 조항을 좀 만들어서 이게 공무 수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응답률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장 이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또한 통계종사자 처우 문제도 올해 법률이 바뀌어서 내용은 들어갔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봤더니 그거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같이 병행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또 사실 그게 대체로 다 예산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조달청장님,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조달청장 임기근 잘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다행히 반환받은 게, 저준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정산받은 게 고준도다 이렇게 확인은 되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업체가 마음먹고 사전에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다음에 정작 반납하는 물품은 포대같이 해서 불량 원자재를 해도 확인이 안되는 문제가 시스템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충분히 개연성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물품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품을 반납

받고 나서 그 물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하는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달청장 임기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예.

○박홍근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 외부청렴도 2022년 대비 하락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현 정부 첫, 대구지방청장 집무실에서 수천만 원 돈 받아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더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 더구나 그 시기가 추석 명절에 집중 감찰 기간이었대요.

그리고 금품수수한 국세청 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2022년 11월부터 공직퇴임 세무사들 1년 동안 수임제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국세청장 강민수 저희 일각에 남아 있는 재량권 남용이나 자의적 판단이 아직도……

○박홍근 위원 그래서 청장님, 우선은 감사관 있잖아요.

옛날에 감사관 하셨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게 원래 개방형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13명 중에서 10명을 다 내부인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박홍근 위원 더구나 특정지역 인사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국세청 지금 고위직들이 대부분 특정지역인데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많이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시고 제대로 된 감찰,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 개방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고공단 문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를 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다른 주제인데…… 됐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조달청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혁신적 기업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조달행정을 활용하여 국내에 있는 혁신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최초에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라고 방침을 결정한 건 2015년이고요. 그리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19년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혁신적 조달기업과 관련돼서 여러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평가해 보실 때 총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혁신제품의 발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혁신기업의 성장 추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 지표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조달청장 임기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직접효과하고 간접효과로 나뉘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혁신제품으로 해서 공공 부문 구매실적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누계로 보면 한 2조 원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지금 기록했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혁신 생태계에 얼마만큼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느냐하고 관련해서는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제품 수준, 그리고 파급효과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정확히 계량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하는 CES에서 10개에서 15개 사이가 혁신상을 지금 수상하고 있고요. 혁신제품을 수상한 제품들이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혁신 생태계를 성장·발전시키는 데 혁신제품 제도 자체가 상당 부분 간접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혁신제도 그 자체를 혁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혁신제품들이 해외 조달시장으로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처음에 혁신제품 선정할 때 글로벌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 대한 평가도 처음부터 같이 하고 계신가요?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은 그런 해외 확장성까지 같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혁신에 대한 평가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궁극적으로는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아무래도 국내 조달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혁신기업이 본격적으로 잘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혁신제품을 선정할 때부터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이형일 예.

○최은석 위원 오전에 구자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청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청장님 일부 기소된 사건도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 중간감사가 일단 발표된 거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맞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외압 등에 대해서, 통계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외압을 배제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외압이 있을 때 별도로 통계청 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 진행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통계청장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규정을 하나 고친 건 있습니다. 외부에 자료 제공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줄 수 있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주지 못하느냐를 좀 더 클리어하게 바꾼 규정을 통해서 일부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사원 감사 등을 좀 같이 보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일부 반영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 통계위원회의 개편 이런 등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일부 개선만으로는 향후에 또 정권이 바뀔 때라든지 이럴 때를 감안하면 완전한 좀…… 뭐랄까, 미봉책같이 들리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 감사 결과나 또 그동안 있었던 사회로부터의 여러 가지 질책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통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외압을 가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말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만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통계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통계청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통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단초가 되는 통계를 꼭 만들 필요가 있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의 품질을 높여야 되고 현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국민들 한 분 한 분은 숫자로 계산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개별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통계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통계청 중립에 관해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독립기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예를 참조하면서 청장님 계실 때 획기적인 조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잘 챙겨 주십시오.

○**통계청장 이형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세금 부과와 징수 과정이 국민 중심으로 잘돼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해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해하실까요? 불편한 점이 많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평가도 국세청이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아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힘들어하실까요, 국세청의 세금 관련한 걸 더 힘들어하실까요? 어띠실 것 같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모두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그런데 수사와 재판은 지금 10여 년 넘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 국수본 창립, 기억나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국정원 개혁해서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양했습니다. 법원도 사법개혁을 추진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기억에 국세청은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은 국세청 공무원들도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있어요.

이것 국민 중심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칠 필요 없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법령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꾸면……

○최기상 위원 제도 자체를, 누구나 내가 낼 세금 쉽게 계산하고 혹시나 잘못 내서 가산세나 가산금 붙을까 봐 세무사를 굳이 찾아가도 되지 않는 정도의 세정 개혁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필요하지만 일부……

○최기상 위원 할 수 있지요, 시간만 많이 주면? 인력도 있고 시간 많이 있으면?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한계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수사와 재판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세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의 공동자산인데 세금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걷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나라를 위한 돈을 내는데 왜 불편해합니까, 불안해하고? 죄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국세청에서 마치 제도를 복잡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전관들이 돈을 번다라는 인식, 인정하세요? 전혀 없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그런 부분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판사들 전관예우 받는 것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국세청의 고위공직자들 그런 얘기 같이 듣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은 국가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가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궁리를 하면 안 되지요.

반대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세정 절차 개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고 샐 세금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한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10년 준비하시면 될까요? 5년 있으면 될까요? 어떠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조금 한계가, 아무래도 세제……

○최기상 위원 시작도 안 해 보시고 한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청장님 2년, 보통 2년 있으시잖아요. 단초를 마련하실 정도의 각오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시작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잖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없애 나가는 게 선진국이고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재판 영역, 심지어 국정원까지 변화의 중심에 섰고 자체적으로 개혁안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강민수 청장님 취임하셨으니까, 2년 동안 다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이나 예산 한계 많겠지요. 그런데 방향은 좀 잡아 주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실 마음이 돼야지 증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공동체 유지가 되지 지금 같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더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의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이어받아서 통계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노령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저출생 문제가 국가소멸위기를 걱정할 만큼 그런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결 대비해서 프레임을 짠 통계 세부 항목들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일본 총무성 취업구조 기본조사인데요. 수입에 따라서 미혼율 본 겹니다. 100만 엔을 벌 때 76.3% 그다음에 800만 엔 이상일 때 17.3%. 일본 30대 취업자 기준 소득별 미혼율을 본 겹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 남성 쪽을 보면 연도별로 보이지요. 연도별로 조사를 쭉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 대비 분위별로 미혼율 혹은 바꿔 말하면 결혼율 이걸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총무성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결혼율 혹은 미혼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똑같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겹니

다. 가구 소득 구간별 평균 출생아 수 그다음에 2009년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 수 그리고 자산도 하나 있더라고요. 주택 유무에 따라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2010년 통계청의 마지막 통계입니다.

사실은 큰 그림으로는, 이 지표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소득의 불균형 혹은 자산의 불균형이 어떻게 결혼율·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큰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데이터들, 독립변수들을 집어넣어야지요.

그래서 14년간 소득 불평등 혹은 자산의 불평등 관련해서 출산율 혹은 결혼율 이런 부분들이, 통계청의 작업들이 2010년 이후로는 없었다,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노동연구원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22년도 논문인데요. 그런데 21년, 20년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결혼을 잘 안 했지요. 그래서 샘플을 어디서 뽑았느냐 하면 19년 이전 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 소득 하위 10% 혼인 비율을 본 겁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저는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26~30세까지 29% 대 8%,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통계청 보면, 물론 좋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짜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 수단별로만 파악이 되되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혼율·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어떤 개혁, 사회 구조적 변수들을 못 넣었기 때문에 과편화된 정책 수단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그 과편화된 정책 수단도 제가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가족 형성 조건인데요, 결정 요인 중에. 여기에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을 넣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형태가 우편향이나 좌편향이나 혹은 정규분포나에 따라서 평균과 중위값이 다르지요. 어느 때 중위값을 써야 되고 어느 때 평균값을 써야 되는지 어떤 걸 대체해야 되는지 상당히 다릅니다, 사회 구조나 사회 환경 여건상. 그렇지요? 특히 소득 불평등이 심할 때, 자산 불평등이 심할 때 어느 값을 써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 것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관련된 연구를 저희가 지금 시작은 했는데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통계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통계청에 관한 감사라는 부분들이 벌써 정부 바뀐 지 2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종료가 안 된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해서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인 감사가 정말 제대로 된 감사였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부분들이 업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무에 관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됐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대상도 너무 과편화된,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서…… 정권을 잡았으면 장차관, 청장 아니면 청와대 이런 정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의 책임과 그것을 실무적으로 준비했었던 부처와 청의 실국장, 과장, 국장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되게 둔탁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것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뿐만 아니라 국토부, 방통위, 산자위, 법무부 등 아직도 과도한 감사로 인해 부처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원 조직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잘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침체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관련한 사안들을 한번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PPT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 제가 인정 때 한번 했는데요.

올해도 세입 관련한 국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목표치를 수행하는 게 어렵고 작년 56조,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종부세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대상 인원도 대략 한 80만 명, 금액도 2조 60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23년이니까.

그리고 전체 보면 세입에서 가장 크게 줄었던 항목이 어디지요, 세목 중에?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범인세……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범인세, 소득세.

범인세, 소득세 그게 주 아닙니까, 한 40조 정도 됐으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결론은, 감세를 얘기하면서 재정건정성과 재정수지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정책적 수단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올해 12월까지 징수 관련한 세정을 진행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원 자체와 세제 자체가 변해서 결론은 쪼그라든 그 상황 속에서……

방법이 있어요, 청장님? 추가적인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9% 내외로 한정적이고 우리 경제가 현재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1.6%, 올해 2% 아래위 정도 되고.

어떻게 보세요, 추계를?

○**국세청장 강민수** 일단 세정 활동을 통해서 세수를 채워 나가는 것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내년 세입,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국세청에서도 현장의 변화된 세제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지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최근 5년간 300억 이상 대형공사 유찰이 해가 갈수록…… 물론 제가 보기에는 특수한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유찰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원래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니 예산에 반영된 대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수요 기관에서 과도하게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고 입찰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작년에 조달청 자체적으로 기술형입찰이 조금 더 잘되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 국토부, 저희 조달청 모여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전반적인 방안을 다시 쭉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비를 적절하게 반영할 건지,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이 되면 총사업비를 신속하게 바꿔 줄 건지, 설계보상비 관련해 가지고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데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대형 국책사업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다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 그 대안들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기재부, 관련 부처, 조달청이 잘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임기근** 예.

○**구자근 위원** 비축물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품목이나 전체적으로?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철금속이 있고요, 경제안보품목이 있는데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품목을 하고 있고요.

○**구자근 위원**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면, 세부로 들어가면 전체 어느 정도 되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전체적으로 보면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요 53일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안보품목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60일분까지 비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공급 계획, 그러니까 방출 계획입니까? 판매 계획이나 혹시라도

상환이나 그런 계획들은 주로 단위를 어떻게 해서 하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걸 같은 경우는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고팔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희소금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축해 놓고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방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달청에서 충남의 한 업체가 탄산리튬 관련해서 대여 후 계약과 다르게 물자를 상환하여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문제점이 순도가 확인이 됐다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 9개월 동안 이런 상황들을 조달청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알게 되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자체 조사나, 과거에 조달청 자체에서 이런 사례를 혹시라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조달청장 임기근 과거 같은 경우는 주로 시험성적서하고 원산지 확인을 죽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도와 관련해 가지고 샘플링으로 검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청장님, 없는 걸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쪽에서 주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결릴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 이후에 다른 절차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사항들을 마련한 적 있나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지금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이 순간의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거는 과거부터 하고 있는데 입고된 후에 샘플링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순도가 맞는 것인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이미 만들어서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제가 아까 조달청 보관물량, 각 지역마다 창고에 물량이 톤당으로 보관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을 말씀드리면 한 10년 동안 비축물자 상환받은 물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조달청장 임기근 정확히……

○구자근 위원 청장님, 수치까지 정확히 다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한 4만 5000t 정도 되는데, 4만 4000~4만 5000t 정도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지점입니다. 조달청이 이제껏 그런 시험성적서, 그런 반환 절차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겸중을 거치지 않고 이런 사정이 있었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톤수가 각 지역에 저장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전수조사 계획은 아까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지금 이 부분들이, 상환받은

이 부분들의 물량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포함되지 않나요?

○조달청장 임기근 이미 저희가 빌려줬다가 상환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를 샘플링 조사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분명히 시간과 물량이나 예산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이 제도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기이 들어온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반환 후에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샘플링 조사를 해 주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좌우간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님입니다.

앞서 구자근 위원님 그리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비축물자 품질 체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샘플링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축물자의 정의가 국가에 재난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부나 민간기관이 원자재나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전략물자와 관련돼서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후에는 광해공단과 함께 이 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황명선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이 사업을 원래 조달청하고 광해광업공단이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요 일원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국회의 지적이 2014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원에서 2017년도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논의가 있어서 관계기관이 만났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때 기재부, 산자부, 조달청, 광물자원공사 4개 기관이 만났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요. 전문 연구기관인 KDI에 의뢰를 해서 방안을 연구한 결과 그 방안에서 비철금속은 조달청이 하는 게 맞겠고 희소금속은 광해광업공단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관계기관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KDI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광해공단과 조달청의 품목에 대해서 구분을 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황명선 위원 당초에는 일원화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관 결정 당시 두 기관의 비축사업의 자금 규모를 보면……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달청이 광물공사보다는 5배가 더 많습니다, 자금 규모로 보면.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황명선 위원 자금도 크고 그리고 비축물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금속 비축 재고량도 한 3.5배, 4배 가깝게 되고 있고요.

결국 다시 말해 자금력, 비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또 오랫동안 해 온 조달청에서 광해공단으로 그렇게 일원화됐다라고 보여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DI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결과보고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몇 가지 좀 하고 싶습니다.

금속 비축 재고량 비교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물가 안정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다음,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금속 비축 재고량 비교에서, 조달청의 역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조달청이 취급하는 광종은 LME 거래 금속인 구리, 알루미늄, 아연, 연, 주석, 니켈 등 6종의 금속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서도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 검토는 광물공사가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화면 계속 넘겨 주시지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요.

결국 조달사업의 가장 큰 의미, 비축물자에 대한 정의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비축사업과 관련돼서 차이는 5배 정도에서 5.5배로 더 커졌고……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광해광업공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축기지마저 포화상태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있었어요.

애초 이관 결정을 할 당시에도 KDI 결과보고서가, 전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력, 법적 근거, 비축사업을 해 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비축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방금 황명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당시의 자금 규모 그리고 비축 규모는 광해광업공단보다 사실 조달청이 컸던 게 맞고요. 그리고 방금 법령을 인용해 주셨는데 법령에 있는 목적도 방금 브리핑해 주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원화 방침을 결정할 때는 자금이나 비축 규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법령의 근거를 보면, 양 기관의 목적에 보면 그 내용은 지금 방금 황명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맞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법과 그리고 2021년에 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보면 목적 말고 그 밑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광산물의 비축·매매·대여라고 광해광업공단도 비축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요. 그 당시 판단은 물가 안정에 관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달청이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산업 육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산업부하고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맺고 있는 광해광업공단이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미 상당 부분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코발트 그리고 금년도에는 오산화 바나듐을, 원래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을 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는 작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광해광업공단은 별도로 비축창고를 건설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리와 취지가 있고 이미 후속조치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익에 부합하겠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명선 위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KDI 보고서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이고, 물론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국익 차원에서 다시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조달청장께서 공공조달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 ESG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공공조달 혁신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취지에 공감하셨으니까. 오전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로, 조달청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발언을 한 것이고요.

관세청장께 질의합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 실내 흡연 이슈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보도 보셨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요. 모를 수도 있지요. 그게 이른바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 관련 건인데 합성니코틴은 실내에서 흡연해도 된다,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합성니코틴이 해가 갈수록 수입량이 많이 증가해요. 21년에 비해서 23년에 한 2배 이상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작년 수입액의 한 75%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연말까지 가면?

○관세청장 고광효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합성니코틴이 이렇게 많이 수입되는 이유가 뭐냐? 돈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개소세가……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내가 이따가 질문을 할 거고.

국제 기준 HS 분류코드로 보면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이 품목코드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율은 6.5%로 똑같습니다. 관세청은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관세를 걷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 천연니코틴은 담배에 해당돼서 세금이 많이 붙고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서 내국세가 붙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김태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성니코틴을 가지고 이른바 불법·탈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나라가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이게 이른바 빠른 통관을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 아닙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니코틴 수입을 하는데, 통관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수입업체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정밀분석법이 개발되어 있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이른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서 적발된 양이 상당하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자료에 보면 한 1만 5000갑에 해당하는 분량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로만 보면 세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국세 부과 여부와 관련돼서는 어떤 자료를 보면 합성니코틴을 제대로 규제하는 경우에 겉을 수 있는 세수 규모가 1조 6000억에 달한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정밀분석법을 개발했는데, 그리고 발표도 했어요. 대대적으로 발표도 했어요. 맞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밀분석 해서 결과 회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세청장 고광효 자체적으로는 4일에서 한 일주일 소요……

○ **김태년 위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부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 환경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 **관세청장 고광효** 재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한 6주 이상 소요가 됩니다.

○ **김태년 위원** 6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것 개발해서 시행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관세청장 고광효**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 합성니코틴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합성니코틴 자체가 세수도 문제지만 이게 범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마약을 집어넣게 되면 이른바 마약 유통의 한 방법이 돼 버리는 거고 또 청소년들도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이것 제대로 전수조사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밀분석법이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이게 규제가 되어야만, 쉽게 이야기하면 합성니코틴이 돈이 안 되어야, 관세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돈이 안 돼야 이런 불법이나 탈법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세청장 고광효** 예, 위원님 지적대로 분석법 개발 이후에 적발된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고요.

외부에 분석 의뢰하는 것이 6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하려면 저희 중앙관세분석소 자체의 분석법 발전, 직원 역량 강화 노력이 지속돼야 되는데, 바이오 탄소분석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현행은 그런 것 때문에 외부기관 분석 의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내부 분석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수영** 다 하셨습니까?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대출 위원** 국세청장님, 주세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맥주는 주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지요, 기준이? 혹시 모르시나?

○ **국세청장 강민수** 맥아가 10% 이상 포함된.....

○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맥아 10% 이상.

그러면 맥아 10% 미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 **국세청장 강민수**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출 위원** 기타 주류지요. 발포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그냥 맥주와 생맥주의 기준은, 맥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맥아 함량은 그 기준이 10% 이상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생맥주든 그냥 맥주든, 병맥주라고 그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캔맥주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생맥주나 그냥 맥주도 맥주라고 불리면 맥아 함량이 10% 이상 돼야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일부 개인이 만드는 발포주들 그런 것들이 생맥주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몇 개 이름 들어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름 들어 봤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그 표시 자체가 허위 표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게 있어서 식약.....

○박대출 위원 어떤 부분이 모호하지요?

일단 맥아 10% 미만으로 만든 술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생맥주라고 해서 시중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게 주류면허법을 한번 보면 발포주, 그러니까 10% 미만인데 그것을 맥주로 팔았다고 할 때 금지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어서.....

○박대출 위원 처벌 규정은 없고, 표시는 일반 주세법에 위반되는 허위 표시가 되는 거고.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것은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연구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아무래도 일단 법에 있는 사항 가지고는 조금 뭐라고 말을 하기가.....

○박대출 위원 어쨌든 이 자체가 생맥주가 아닌데 생맥주로 둔갑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시중 유통체계를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표기 자체가.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대출 위원 그것도 일종의 맥아의 종류라면 10%..... 개인이 만드는 것은 생맥주가 10% 미만이라도, 그냥 10% 미만을 기준으로 바꾸든지 주세법을 바꾸든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바꾸든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 연구해 보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아까 해외직구 물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보니까 4년 만에 해외직구 물량이 건수로 3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2019년 4300만 건에서 2023년에 1억 3100만 건 이렇게 3배 늘어났는데, 지금 중국발 물량이 늘어난 게 무려 8배입니다. 그렇지요, 수치가?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원래 2019년도에는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였는데 이제 67.6%, 절반이 넘고 개수 기준으로는 8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알리, 테무 등 중국발 공습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지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기준도…… 테무가 작년 7월 말 이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올해 1년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더 늘어났을 겁니다. 폭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세관인력 1명이 2019년도에는 23만 4000개를 담당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41만 7000개를 담당하게 되고 올해는 또 얼마나 담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폭증하는 업무량이 지금 감당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평택세관의 직구 물량이, 인천공항세관 여기서 밀리기 때문에 평택세관으로 가게 돼서 평택세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다 보면 유해물품,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 들여올 가능성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렇게 폭증하다 보면.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인력도 늘리는데, 인력을 늘리는 게 올해 기재부가 26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에 요청해 놓고 있지요? 이 숫자가 충분한 숫자입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충분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200명가량 늘려 달라고 정기 직제 때……

○박대출 위원 요청은 200명?

○관세청장 고광효 예, 수시하고 정기 직제 합하면 한 210명 정도 늘려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문제도 연구해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AI 시스템도 연구해야 될 거예요.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지금 직구 관련해서는 전용 플랫폼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직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물품 차단을 위해서 AI 엑스레이 도입이라든지 다른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세관 직원이 짜고 외국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묻고 싶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몸에다가 마약을 두르고 또 옷 사이에 숨겨서 들여왔다고 해요. 이게 보안검색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들여올 수 있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몸을 다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분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성준 위원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두르고 들어오거나 옷 사이에 숨기고 들어오는 거는?

○관세청장 고광효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사람의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만 잡아낸다든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핸드 캐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짐들은 엑스레이를 다 찍어 보는데 핸드 캐리는 선별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몸에 마약을 붙이는 보디 패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전부 손으로 만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밀리미터파라는 것을 도입하고 또 몸의 온도차를 측정해서.....

○진성준 위원 글쎄, 그게 옛날도 아니고 작년 일이잖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작년 1월.....

○진성준 위원 2023년 1월 달 일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오는 그 해당 여객기는 검역 일제검사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검역 일제검사 대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검역을 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대상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세관 신고를 마치고는.....

○관세청장 고광효 검역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진성준 위원 글쎄, 세관 신고를 마치고는 검역대로 안내해 주는 것까지가 세관이 해야 되는 일이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검역대로 가지 않고 그냥 입국장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안내를 받아서.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렇게……

○진성준 위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세관 직원 안내를 받아서.

○관세청장 고광효 나중에 검거된 말레이시아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짜고 들여오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인천세관에서 보도자료에 세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빼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 감찰팀에서, 감찰은 정식 감찰은 안 했지만 근무상황, 사실관계를 다 검토를 해 보니 그 말레이시아인이 진술한 것과 우리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봐 왔거든요. 마약 운반책이 세관한테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도 된다. 마약 일당들이 그런 작전을 쓴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판례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약 관련한 정보기관도 그런 수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는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이 확정적으로 드러났을 때만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 그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관 직원 다섯 사람이 입건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별 진척이 없다고 계속 설명하셨는데, 올해 5월 2일 날 두 사람이 또 입건됐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이분들은 어떤 혐의입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이것은 저희가 자랑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뚫렸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이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뚫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무유기로 그때 아마 경찰에서 그렇게 혐의를……

○진성준 위원 두고 있는 것 같다?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똑같은 말레이시아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1건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 1건 잡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정보 분석을 해서 12명을 저희 APIS라는 데 걸어 가지고 나중에 그중의 1명이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명 중에, 말레이시아인입니다. 4명이 그 당시의 일주일 전, 그러니까 1월 하순경에 들어온 6명 중에 4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주일 전의 것은 못 잡았고 일주일 후의 것은 잡은 겁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공항에서 마약을 다 검거하고 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관세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서 그것을 잡아 준 것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징계를 안 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한테 뇌물을 먹여서 운반을 통과시켜 줬다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적발을 못 하고 마약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실책이 있었다면,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직무유기로 검찰이 또 입건도 했다면서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진성준 위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을 통해서 징계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왜 하지 않고 수사 결과가 다 드러나면 그때 조치하겠다라고만 얘기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진성준 위원** 더 큰 죄는 놔두더라도, 뇌물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우리 직원들이 모든 것을 100%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놓친 것을 전부 다 감찰을 해서 징계를 주게 되면 아마 공항세관에 남아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그렇게 구멍이 많습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아니,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국세청장님,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미국의 경우는 2014년도에 가업상속공제 폐지했다는데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간단하게 답변을……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가요?

일본의 경우는 비상장 가족회사에만 일괄 공제가 아닌 납세유예 형태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모르신다 답변하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차규근 위원** 영국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에만 100% 적용하고 상장주식에는 50%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도?

○**국세청장 강민수** 이것은 자료에서 봤습니다.

○**차규근 위원** 보셨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

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 가업상속이 아니고 기업승계제도인데 독일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독일의 경우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가족기업의 약 60% 이상이 외부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안 되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기업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또 독일의 경우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몇 등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5등급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1등급입니다. 독일은 노조 권한이 아주 강력한 국가로 회사별 노조가 아니라 업종별 노조를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 결의에도……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노동이사제도라는 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다릅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몰랐습니다.

○**차규근 위원**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 독일의 경우 2014년도에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공제가 중소 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제의 필요성 심사도 없이 대규모 기업에까지 적용된다면 기업 재산에 대한 무상취득 혜택 부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 평등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정밀하고 알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이다’라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제도가 많이 수정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차규근 위원** 저는 그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앞 문장…… 이런 취지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반대하지는 않으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당한 경우가 59건이고 추징금액이,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액이 54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는다기보다는 상속세 우회 수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상속세에 관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다 그려길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국세청장님,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소득이 합산돼 가지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득공제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과세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가산이 안 되고 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금투세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그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관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수 관리에 비상이 켜진 상황인데요. 관세청이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태료 수납률을 보더라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6월 현재 관세청이 관세법이라든지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가 688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2억 7900만 원에 불과하고요. 또 최근 5년 과태료 수납률을 보더라도 2019년 48.9%에서 올해 6월 현재 9.1%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올해 6월 현재 620억 2500만 원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수납 부진으로 결국 제재처분의 실효성까지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 6월 현재 관세 누적 체납금액은 2조 420억입니다. 2020년 1조 1302억에서 관세 체납액이 4년 반 만에 거의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도 394억입니다. 결국 체납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약 4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떼이게 된 건데요.

관세청이 과태료 수납 실적을 개선하거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장 고광효 체납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또 금융자산 조사, 징세기관과의 협동단속 등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또 작년부터 상시 체납정리체제를 통해서 체납 관리 강화에 노력 중에 있고요. 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전압류제도를 도입해서 수납률 제고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리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농산물 범칙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고율의 추천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추징세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무재산이나 폐업 등으로 고액장기체납, 이월액이 많은 그런 데에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또 엄정한 행정제재,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가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서 납세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청장님, 세제실장도 역임하셨잖아요. 효율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서도 부족한 세수를 상당 부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현행 국가계약법상 보게 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이 있잖아요. 지정이 되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약을 받게 되지요.

현재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담합행위라든지 불공정 또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약 776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입찰에 참여해서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가 최근 3년간 713건이고 계약금 액만 2조 160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집행정지만 인용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한 업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총 17건, 금액으로는 9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부정당업자가 제재 처분을 무력화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수령하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담보금을 부과한 후에 계약 당사자가 본안에서 폐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담보를 국고에 귀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 방금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원래 이렇게 국가계약을 이행을 안 한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니 집행정지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집행정지를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집행정지를 당하게 되면 우수제품이나 혁신제품 수익적 처분을 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이 지금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공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로써 지금 방금 박성훈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처럼 계약보증금과 별개의 담보금을 부과한달지 현재는 ‘이런 이런 조달기업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만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문제 있는 기업의 물건을 이런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공표하는 방안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청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임기근 조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민수 청장님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임기근 많이 못 봤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날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유창, 처가 관련된 이런 의혹들,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강민수 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향후 국세청장으로서 처가에게, 이 유창에 불이익이 가면 갔지 절대 특별하게 이익이 되지 않겠다 이런 각오 말씀하셨어요, 국세청장님께서. 그러셨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조달시장 규모가 한 200조 원 정도 되지요,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임기근 예, 지금 23년도로 209조 원입니다.

○신영대 위원 209조 원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 2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신영대 위원 2022년 26.4조 원 정도 됐고요. 한 10% 정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은 전체 조달시장 규모에서 한 10%가 조금 넘는 규모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 조달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입해서 남아 있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조달청에서?

○조달청장 임기근 예.

○신영대 위원 과거 얘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중견기업이 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 쪽개기 문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됐었어요. 2010년 12월에 사무용 가구 1위 업체인 퍼시스가 회사를 분할해서 자회사 팀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때 퍼시스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못 해 기업을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후 중소기업 업계와 언론에서 이런 꼼수를 질타합니다. 결국은 퍼시스가 못 버티고 팀스를 종업원지주회사로 변경하면서 경영을 포기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조달청장 임기근 아니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영대 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 가지고 조달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분할 꼼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유창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청문회 내용을 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보시면 그 내용은 조달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중견기업들이, 아까 퍼시스 대표가 표현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하소연도 일부분 타당하기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도개선을 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신영대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조달청장 임기근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에 묶여 있는 것은 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혁신제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 같은 경우는 혁신제품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연 매출 2000억 미만의 회사가 어쨌든 중소기업을 졸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중소기업 시절에 3년 이상 조달시장에 참여해 왔으면 중견기업이 됐더라도 추가 3년 동안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지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쪽개기를 못하게 하려고?

○조달청장 임기근 예.

○신영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작동을 못하고 여전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쪽개기, 자회사 설립하고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달청장 임기근 예.

○신영대 위원 이런 분야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도개선까지 저희 청 차원에서 깊숙하게 해 본 적은 솔직하게 없는 상황이고요. 위장 중소기업 문제라면 이것은 확실히 판로지원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의 취지대로 법 적용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쪽개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기업 쪽개기, 이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단 기업을 쪽개서 담합의 문제가 의심이 될 때는 저희가 가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통계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공직을 30년 이상 했는데 이런 공문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공직자 출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공문 결재를 받은 날이 2019년 11월 4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보도자료를 나눠 주고 브리핑하는 것을 2019년 10월 29일, 즉 결재일보다 더 앞에 한 것을 뒤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성한 사람도 좀 이상했는지 현안 처리가 바빠 가지고 문서 기안이 자연돼서 사후에 받았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고 있는 이런 문서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인포그래픽이나 보도자료에서 다 뺐거든요. 최초에 만들어 놨던 자료에는 있었는데 뒤에 실제로 발표한 자료에는 다 빠진 형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뒤에 다시 또 받아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바빠서, 혼란 처리 바빠서 끝나고 나서 브리핑 다 하고 자료 배포하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결재를 브리핑하기 전에 받았는데 뒤에 첨부물이 바뀌니까, 즉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것을 숨겼으니까 다시 받아 놔야 되겠다 해서 첨부물이, 내용물이 바뀌어서 다시 받았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가정이 제일 큰 경우일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이것 잘못 바꿔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되니 청장 사인 하나 받아 놔야 되겠다 해서 받아 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을 공직자들이 남겨 놓은, 흔적을 남겨 놓은 그런 문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청장님께서 잘 조직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다음,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박수영 위원 R&D 세액공제 규모하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범인세 전체도 늘어나지만 R&D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방법이, R&D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받게 되는데요. 인터넷 상에 보면, 이게 완전 봉인가 봐요. 이런 각종 동영상들이 떠 있는데 병원연구소가 절세의 갑이다, 신이 내린 절세 방법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다, 갑자기 조사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병원도 연구소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니까 국세청에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셔서 추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징 건수나 추징 금액이 거의 5배 안팎으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즉 사후관리에서 결렬 정도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R&D 세액공제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왜 사전에 이런 것은 안 할까, 사후에 추징하는 노력 가지고 사전에 심사하면 될 텐데. 봤더니 사전심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국세청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전심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주선해 주는 소위 컨설팅회사라는 사람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해서 소위 절세 또는 탈세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 놓은 사이트를 보시면 ‘신청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왜냐? 안에 읽어 보면 국세청의 사전심사 신청하면 빡세게 해 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 패스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만들어서 세금 탈세하는 게 낫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수도 자꾸 결손 나고 있는데 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R&D 세액공제, 청장님 어떻게 해야 좀 바르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갈 수 있을까요?

○**국세청장 강민수** 먼저 일단 한계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사전심사 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커버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현재로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현재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지금 R&D 신청 건수가 한 4만 건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2000건, 2100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95% 정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 걸러 내고 걸러 내고 일단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유튜브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광고하는 컨설팅 업체는 몇 곳 제대로 들여다봐서 그 짹을 좀 잘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짹을 좀 잘라 주십시오.

○**국세청장 강민수** 예.

○**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관세청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마약 밀수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연루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시작 자체가 인천세관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인천세관에서 조 모 경무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보도자료에서 좀 빼 달라 부탁을 한 거잖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보도자료에서 빼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것이고.

○**관세청장 고광효** 제가 듣기로는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정태호 위원** 그게 그거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태호 위원** 결국에 조 모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제외가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수사팀장이었던 팀장이 최근에 관세청장님과 그리고 당시의 서울청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조 모 경무관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수사팀장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다 고발까지 한 거잖아요. 본인은 아마, 그 수사팀장은 그 수사팀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그리니까 이게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 수사팀장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관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관세청장님 말씀을 죽 들어 보면 전혀 직원들은 관여된 바가 없고……

○관세청장 고광효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요?

○관세청장 고광효 직원이 관여된 바 없다는 게 아니고 관여될 수도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고……

○정태호 위원 수사 초기 단계다?

○관세청장 고광효 수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정태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수사를 엄정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관세청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수사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관세청장 고광효 일단은 저희는 수사가 1년 정도 경과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다른 인사조치도 하고 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정태호 위원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훈령이 있는 것 같은데.

○관세청장 고광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훈령 알고 계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예.

○정태호 위원 훈령 29조(확인감찰)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1항 1호에 보면, 내가 문구를 읽는 게 아니라 전체 취지를 그냥…… 관세청장은 사고 또는 비위·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확인감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고광효 저희가 확인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날 근무상황 같은 것을 검토했는데 정황이 말레이시아 범인들이 진술한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훈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훈령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관세청장께서는 밀수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의 비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건데……

○관세청장 고광효 예, 왜냐하면……

○정태호 위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훈령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감찰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관세청장님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감찰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요?

○관세청장 고광효 거기 29조 1항 1호에 보면 사고 또는 비위·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인데……

○정태호 위원 인지하셨잖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날 근무상황을 보면 말레이시아 범인들이 진술한 것과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 것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감찰을 하고 나서 그것 판단을 하셔야지, 감찰도 안 하셨잖아요.

○관세청장 고광효 아니, 이것은 근무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외에도 다른 말레이시아 범인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서, 혹시나 저희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제 판단은 명확하게 훈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께서 확인감찰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위원님.

○정태호 위원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24년 1월 1일부터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 8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잖아요. 연두색,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딱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전의 자동차 판매량, 특히 고급차 판매량이나 이런 추이를 보면 이런 부분을 차를 사시는 구매자분들이 많이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작된 지 몇 개월 됐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법인 명의 1억 원 이상 수입 승용차 판매량 추이를 보니까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오듯이, 2023년 상반기만 비교를 해 본 겁니다. 22년, 23년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 한 50% 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후반기로 오면서……

제가 아까 7분 질의를 못 해 가지고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송언석 계속 드려요.

○정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승용차 판매량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5월까지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월 달에서 5월 사이에 수입 승용차 판매량 현황을 보니까……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차량이 33%고 개인차량이 66%인데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아주 최고급차들을 보면 법인 차가 74%, 85%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최고급차들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까지 나왔나 하면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의 상징처럼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연두색 색깔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쪽은 법인차량에 대한 정의라든가 규모, 역할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되게 엄격하고 실제로 운영일지들을 다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해 보셔서, 지금 이제 5개월 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검토해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정태호 위원**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통계를 봤더니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4월 달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됐을 거예요.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계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아서 열람한 건…… 계약 체결 후에는 동의가 필요 없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체결 후에 동의가 불필요하니까 계약 체결 후에 열람한 건을 보니까 실제로 계약 체결 전의 열람 비율은 약 9.5%, 한 10%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직도 전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전에 국세 미납 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가 작동하려면 뭔가 좀 새롭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 강민수** 아무래도 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선뜻 해 주기가 조금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지요. 임차인이, 이 사람이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국세 미납 실적을 보여 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그러나 지금 전세사기가 막 발생한 이 시점에서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또 당위적으로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나 국세청에서 도입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실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입하신 이 제도

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검을 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대안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금투세 시행되어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하신 거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른 것에 또 영향이 있는 게 있나요?

○국세청장 강민수 크게 아까 말씀하신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이 정도가 일단 여러 분들이 주목하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영향이 없다.

인적공제는 일부 영향이 있나요?

○국세청장 강민수 인적공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제 배우자가 만약에 투자이익이 100만 원 이상 났다 그러면 이 친구를 부양가족 공제에서 빼고 그 친구가 쓴 여러 가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전산시스템 자체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거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징계 문제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간단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에 공무원 징계한 걸 보니까.....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몇 %가 되지요, 국세청에서?

○국세청장 강민수 저희 2만 1000명 중에서 8%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국세청 징계 건을 보니까 5급 이상이 더 많더라고요. 한 15% 정도 징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국세청장 강민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급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5급 이상이 8%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최근 6년간 금품수수 등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입건됐거나 기소됐거나 형사 판결 등의 데이터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지금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서 했는데, 이걸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혹시 어느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통계자료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국세청 청렴도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특히 청렴 체감도 이런 게 좀 하락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장님의 국세청 업무보고할 때도 눈높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논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도 다른, 권익위에서 다른 평가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내부적인, 심리적인 게 있어서 획일적이고 완전히 그냥…… 믿을 만한 평가인가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향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저 부분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조금……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평가고 민원인의 평가기도 하니, 그러니까 내부의 평가는 공무원 스스로의 평가기도 합니다. 그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밖에서 보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부 직원들이 보는 청렴도는 사실은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은데, 외부에 저런 사건들이 좀 있고 저희가 징수기관이다 보니까 조사나 점검을 받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는 것도 약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청렴도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좀 별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청장님과 뒤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못살겠다라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인간이 못살겠다고 말하실 때는 살 방법이 없거나 살 이유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살 방법이 없는 분한테 방법을 찾아 줘야 되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 자녀 진학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말고 살 방법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고위공무원들 옆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도 20년 동안 법관 생활 할 때는 주위에 그런 친지나 가족이 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4년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틀리지는 않지요. 견해가 다를 뿐인데 문제는 이 견해의 근본이 되는 토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세, 종부세, 중여세 문제, 논의할 만한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꼭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토대로 할 때 가능하다,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상속이나 중여를 통한 불평등한 부의 대물림이 시장이나 학교에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눈감고 정책을 한다? 저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늘 말씀해 드리고요.

50여 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가 1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들에게 노동자 친구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살 방법이 없어서 죽겠다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친구로 둬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의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언론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돋아나는 편견을 도려내려면 매일 밤 물어야 된다고.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다른 계층, 분야, 직업, 다른 생각,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과 만날 수는 없었느냐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고. 그 지점을 청장님들께서 특히 고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늘 성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청장이 공직에서 가장 선배시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각오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관세청장 고광효 위원님, 시장의 약자를 더 생각하라는 말씀 같으신데, 하여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회의 저소득층, 이런 층에 더 어떤 피해가 가는 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3분 추가질의는 순수한 정책질의 위주로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님, ‘가짜 3.3 노동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임금노동자의 형태로 일을 하는데 계약 방식과 소득세의 종류는 독립된 사업자로 위장당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가짜 3.3%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장님, 국세청의 업무 중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업무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어떤 말씀 하시는……

○**차규근 위원** 바로 떠오르지 않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9번 일자리 안전망 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3번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입니다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공통 국정과제입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시간 소득 파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현재 국세청은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되어 있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청장님, 그런데 국세청이 취합하고 있는 소득 자료가 소위 가짜 3.3% 노동자를 확인하는 데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일부 위장 제출된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청장님, 이 가짜 3.3% 노동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의 소득 자료가 필요한데요. 가짜 3.3% 노동자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과세정보 공유 등 업무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금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 만일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정보 공유 법적 근거를 만들면 국세청이 유관기관과 과세정보를 공유해서 역할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법률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저희가 협조해야 됩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1인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최근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언론 기사 본 기억이 나시지요? 1인 유튜브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런 기사 많았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분들이 영상 콘텐츠 화면에 개인 계좌 명시하고 후원금 받는 경우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후원금을 사업 소득이나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 신설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금

그 소득이 소득세냐 중여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국세청이 해 줘야 돼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집행을 좀 촘촘히 더 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규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재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김영환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고향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및 이형일 통계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결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첨가 위원(1인)

천하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세청
 청장 강민수
 차장 김태호
 기획조정관 이동운
 정보화관리관 김국현
 감사관 김지훈
 납세자보호관 변혜정
 국제조세관리관 박재형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민주원
법인납세국장 최재봉
자산과세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정재수
복지세정관리단장 이승수
관세청
청장 고광효
차장 이명구
기획조정관 이종욱
감사관 유영한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
통관국장 고석진
심사국장 한민
조사국장 한창령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
조달청
청장 임기근
차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김웅결
공정조달국장 이형식
구매사업국장 권혁재
기술서비스국장 임병철
시설사업국장 강성민
공공물자국장 노중현
신성장조달기획관 전태원
통계청
청장 이형일
기획조정관 이주현
통계정책국장 이명호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송영선
사회통계국장 서운주
조사관리국장 박진우
통계서비스정책관 정구현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공미숙

【보고사항】**○의안 회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1)

7월 1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이상 6건 7월 16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7월 17일 회부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8)

이상 5건 7월 1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이상 7건 7월 19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0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